

3.1운동 100주년 특별 대화모임

한일 관계: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

韓日關係: 新たな100年を模索する

때 2019년 3월 29일(금)

오후 2:30 - 6:00

곳 대화의 집

주최 대화문화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회의

| | |
|----|--|
| | 인사말 |
| 3 |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
| | 환영사 |
| 5 | 이흥구 전 국무총리 |
| | 발제 1 |
| 7 | 일한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찾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
| | 발제 2 |
| 13 | 일한 협력으로 일조 국교 수립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
| | 논평 |
| 18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질의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
| 22 | 참고: 지금 <김대중·오부치게이조 공동선언>을 생각한다 |
| 26 | 대화 |
| 49 | 참석자 명단 |
| | 부록 |
| 54 | [Japanese Version] |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하면서 한일 관계의 개선과 새로운 창조적 백년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마당을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불행했던 한일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상화와 선린관계의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님과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님을 발제자로 모시게 되어 오늘의 대화가 더 큰 의미와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의 선열들이 목숨 바쳐 외친 구호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동양평화였는데, 해방과 함께 분단된 남과 북은 1950년에 치른 전쟁의 종전선언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진정한 화해와 역사청산을 하지 못한 한일 양국은 혐오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해 경계를 늦추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정치인들마저 위협한 발언을 내뱉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5년 8월, 해방 50주년을 맞는 해에 저희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일본 이와나미(岩波) 서점과 함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성인들의 대화를 서울과 동경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교수, 야스에 료스케(安江良介) 세카이(世界) 편집장,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작가님과 강원용, 지명관, 김지하 등 한·일 지성인들이 정치적인 역사청산이 어렵더라도 지식인들과 시민사회가 나서 사죄와 용서를 통해 화해하고 내셔널리즘을 극복해 동북아의 평화생명공동체를 이루자는 논의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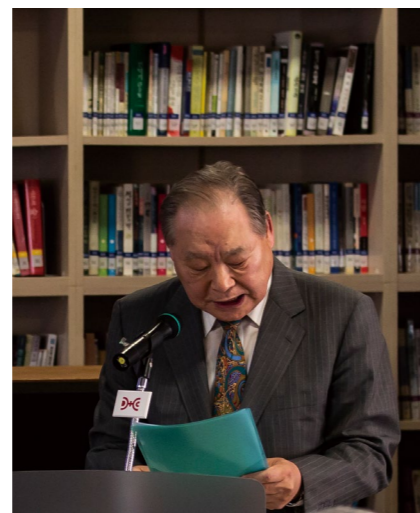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오에 겐자부로 씨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직 속죄를 다 하지 못한 사람과 아직 상대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공동의 미래를 향한 협력이 가능해야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명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상황에서도 적합한, 우리가 경청하고 명심해야 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어 경의와 사죄의 뜻을 표시하신 것은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어 사죄한 역사적 사건에 못지않은 감동을 일으켜 화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독일인들이 브란트를 칭찬하듯이 칭찬하거나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와다 하루키 교수께서 주도한 226인 지식인 선언이 무라야마 담화와 간 나오토 담화를 따라서 식민지 지배의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고 호소했지만 일본의 정계나 시민 여론은 아직 이를 외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사죄와 용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오에 겐자부로 의 충고대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공동의 미래를 위해 만나고 대화하며 협력의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협력의 길을 찾는 한 마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화모임을 여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한일 관계: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한일 관계: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 대화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히 일본으로부터 먼 길을 오신 오랜 친구 하토야마 전 총리와 와다 교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문제와, 미국과 중국 간 정치·경제적 패권 경쟁이 수반한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조성하려면 솔직한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역사는 결국 각 세대의 존재의식과 상황인식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임에선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일 관계의 성격과 미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리더십을 제공하신 하토야마 총리와 와다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기대됩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4년 전인 2015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렸던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후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식민지 시대에 옥고를 치렀던 분들의 영전에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와다 교수께서는 3.1절 100주년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긴장된 시점인 지난 2월 6일, 일본 지식인 226명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한·일, 북·일 간의 상호 이해, 상호 부조의 길로 나아가자”는 성명 발표를 주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말씀을 서울의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직접 듣게 된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하신 발제 요지를 보면 한일 관계의 과거와 미래를 좌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핵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이를 구성하는 정치 지도자나 세력인가, 또는 일반 국민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인가 하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친황들께서 지난 한일 관계에서 취하였던 진취적 입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 한국인에게 이해되고 있느냐 못지않게 일본 국민이 이해 또는 동조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은 대단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집권층이나 각계 지도자와 일본 국민들 사이의 ‘인식의 괴리’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한일 양국이 각기 직면한 공통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로 못 박으려는 시도는 한국민의 감정으로는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전쟁에서의 패전국이나 식민통치의 가해국은 사실상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시인합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전쟁 중 징용공 문제 등 인간의 존엄과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는 한일 양측이 새로운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며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자립’과 ‘공생’

을 가능케 하는 우애정신을 함양하고 이에 입각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로 한일이 함께 전진할 것을 기대하며 처방하고 있습니다.

와다 교수께서는 지난 달 ‘226명 지식인 성명’ 이전에 2010년 이른바 ‘한일합병조약’ 100주년에도 일본 지식인 500명과 한국 지식인 500명의 공동성명으로 그 ‘병합’은 법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부당한 ‘신화’에 근거한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근자에 와다 교수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한국 무시 및 적대시 태도이며, 1904년에 시작됐던 41년간의 군사점령과 1910년 이래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기억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식의 분열’을 반영한다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병합조약’에 대한 무효성과 기만성을 확실히 밝히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웃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1 독립선언서가 한국의 독립은, 동시에 일본을 잘못된 길로부터 구해낼 수 있음을 강조 하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미 1910년 옥중에서 남기신 ‘동양평화론’의 비전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구현하는 데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과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는 긴밀히 연관된 목표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지혜와 동력을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와 국민들, 특히 지식인들이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발제 1

일한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찾아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友紀夫, 전 일본 총리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일한 관계의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남북 관계가 몇 년 사이 어떻게 움직일지조차 분명한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100년 후까지는 가능성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 형태로 일한 관계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담아 조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한 관계의 향후 100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선 과거 백 년의 총괄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한 관계 과거 백 년의 총괄

문재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중요하고 친일잔재 청산이 과제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이웃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피해자들이란 분명 최근 현안인 징용공이나 위안부였던 분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겠지만, 이들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한 외교 마찰의 심화는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느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훌륭한 연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설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이 어떻게 응답할지가 앞으로의 일한 관계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0년 전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개국을 한 일본은 구미 열강에 저서는 안 되겠다며 뒤늦게 해외에 진출하고, 오키나와, 타이완 등과 함께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행동은 대일본(大日本)주의라 불립니다.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열병에 걸려 식산흥업(殖産興業),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구호 아래 크고 강한 나라를 지향하며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은 확대되고 일본은 역사적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대일본주의에 따라 일련의 행동을 취한 일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총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도쿄재판의 결과를 수용했지만, 이는 연합국 측이 수행한 재판입니다. 때문에 식민지화나 전쟁을 통해 고통과 비극을 입힌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일본주의를 수행한 것은 정부였지만, 당시의 최고책임자는 천황 폐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번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천황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한 말은 최고책임자가 사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일 것입니다. 다만 일본인 대부분은 천황 폐하를 숭상(尊崇)하고 있으며, 현 헌법상 천황 폐하는 어디까지나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 상징적 존재이다 보니, 많은 일본 국민이 “문의장은 그런 말까지 하나”라고 생각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황의 사죄 표명

그렇다면, 천황 폐하는 사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현재의 아키히토(明仁) 천황은 오는 5월에 ‘생전 퇴위’를 하십니다. 아키히토 천황이 1990년 5월, 귀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의 궁중만찬회 자리에서 “한반도와 우리나라의 길고도 풍요로운 교류 역사를 돌아볼 때, 쇼와(昭和) 천황께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사이에 불행한 과거가 존재했음은 참으로 유감이며 또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을 상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인해 초래된 이 불행한 시기에 귀국 사람들이 맞본 고통을 생각하며, 저는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죄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탄생일에 즈음해서는 폐하 자신의 말로서, “간무(桓武)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본래는 금기가 아닐까 생각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이 자신의 태생(出自)에 관한 사항까지 언급한 것은 천황 폐하가 얼마나 현재와 같은 일한 관계를 우려하고 있는가, 또한 풍부한 교류가 이뤄지던 옛 관계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의사 표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어 1994년 3월에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한 궁중만찬회에서 천황 폐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귀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사람들의 교류는 역사서에 드러나기 이전의 아득한 옛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귀국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문물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우리 조상은 귀국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길고도 밀접한 교류 동안 우리나라가 한반도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고난을 입힌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 일에 대한 저의 깊은 슬픔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만,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전후 우리 국민은 과거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서서 귀국 국민과의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우정을 만들어 내고자 힘써왔습니다.”

천황 폐하가 가장 일찍, 가장 진지하게, 가장 명확하게 한국 여러분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저는 천황 폐하의 한국민에 대한 마음을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국민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국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총리 재임 중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천황 폐하의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뜻을 천황 폐하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폐하의 방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5월에 탄생하는 새로운 천황 폐하가 한국민의 환영 속에서 방한하게 될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여러분들은 천황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지니셨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기회가 생겨 신 천황이 헤이세이(平成) 천황과 같은 심정으로 한국민을 접할 때 일한 관계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역사

총괄이라는 의미에서는 천황 폐하보다도 국민의 의사로서 일본 정부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5년, 전후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먼저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밝히며 평화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쉬이 망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경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책을 그르쳐 전쟁으로 가는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의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와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라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입힌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성과 사죄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반성 위에서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끝맺었습니다. 천황 폐하의 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일본은 훗날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게 된 경제적 침체의 입구에 이미 들어서 있었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반성 아래 평화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육해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헌법 9조를 통해 맹세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경제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루어 기적적인 전후 부흥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여서, 경제에 거품이 일었고 그 대책에 실패한 탓에 이후 오랫동안 경제 불황 시대가 계속되었고 국민들은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 등을 필두로 주변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중국이나 한국 등 사람들에게 관용의 마음을 점차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일부 일본인의 혐한(嫌韓)과 혐중(嫌中) 감정을 증폭시켰습니다. 독선적이고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확산되는 바탕을 만든 셈입니다.

국민의 불만이 한때는 정-관-계계의 유착 체질로 물든 자민당 정권을 향해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실현되었고 하토야마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일본 외교의 중심축을 옮겨 대미 의존보다 미일 안보를 기본으로 삼되 아시아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기 때문에 한일, 중일 관계 모두 양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자민당 정권이 복귀하자,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재검토의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중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 담화 검증 발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이어져, 일한 관계는 정상회담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 후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양국 정부 간 합의가 성립하는 등 일시적으로는 최악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작금의 징용공 출신자 문제나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일어나면서 일한 관계는 지극히 비정상적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에 미국의 요청도 있어 일한 외교장관이 회담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합의를 읽은 순간, 이것 가지고는 최종적 결말을 볼 수 없는 게 아닐까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에 따라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10억 엔 거출이 결정됐지만, 이 합의를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라 한 것은 일본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로 두 번 다시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라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일본의 철학자 우치다 다쓰루(内田樹) 선생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과거 전쟁 당시의 중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 냉엄한 비판과 사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일한조약으로 법적으로는 결말을 봤다, 또는 한국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했으니 언제까지나 똑같은 문제를 들먹이지 말라는 식으로 짜증 섞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전쟁 피해에 대해서 패전국이 짊어지는 것은 사실상 ‘무한책임’입니다. 정해진 배상을 했으니 책임은 이제 다했다는 말을 패전국 측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승국이든 구 식민국이든 그쪽에서 먼저 ‘이제 더 이상 책임 추궁은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책임은 계속 짊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일본 위정자가 가질 수 있을 때에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전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대법원이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고노(河野) 외상등이 비난 발언을 거듭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에 야나이(柳井) 조약 국장이 “개인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한 양국 정부가 징용공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냉철하게 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는 작년 말 일본해(동해)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많은 국민이 대단히 위협한 행위라며 항의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이 함정은 조난된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와중이었고, 한국군 측에 자위대기를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항공막료장을 지낸 다모가미(田母神) 씨에 따르면, 최근의 화기관제 레이더는 상시적으로 거의 전방위로 전파를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항공기 등에 전파가 조사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협하다며 크게 범석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냉철해지고, 지나친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냉철함을 잃게 하여 호전적 분위기로 순식간에 기울어버리는 일본 여론에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만큼 일한 관계에서 미래를 직시하며 냉철해야 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혜택과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누구보다 서로에게서 영향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이웃끼리 서로 증오하면 서로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을 터이고, 반대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더욱 더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애’이념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

저의 조부이신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는 1954년 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가 1956년 일소 국교 회복을 이루고 사임하셨습니다. 그는 전후에 곧 총리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내각구성 직전에 추방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방되어 청경우독(晴耕雨誥)의 나날을 보내던 중 리하르트 코우텐호 페칼레르기(Richard Coudenhove-Kalergi) 백작의 저서 《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을 읽고 심취하게 됐고, 그의 ‘우애’ 이념에 공감하여 《자유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복귀한 후에는 우애를 ‘상호 존중’, ‘상호 이해’, ‘상호 부조’라고 설파하면서, 우애 사회의 실현에 힘썼습니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오스트리아인 코우텐호페칼레르기 백작은 자유와 평등의 가교로서 ‘우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0세기 초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두 전체주의로 뒤덮인 유

럽에서 전체주의와 싸우기 위한 사상으로 ‘우애’를 제창한 것입니다. 그는 우애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범유럽주의를 주창했으며,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탄생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서로 미워하던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석탄과 철강의 공동 관리를 비롯한 협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주변국에서도 경제 중심의 협력관계가 심화되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그 움직임이 오늘날의 유럽연합(EU)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또다시 전쟁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사실상 부전(不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애가 결코 과거 이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세계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이념이라는 점입니다. 우애란 자기 존엄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엄성도 똑같이 존중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도 존중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개성을 살려 서로 돕는 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애는 자립과 공생(共生)으로 인수분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립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성이 존중됩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 타자와 자신이 다른 존재임을 이해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의존하거나 무작정 기대는 것이 아닌 공생입니다. 공생 없는 자립도, 자립 없는 공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애란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성립되는 이념입니다. 근대 국가는 한 나라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국과의 다양한 협력과 영향 속에서 존재합니다. 국가로서 어떻게 자립을 도모하며 다른 나라와 공생해 나갈 것인가가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일본은 미국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니 중심축을 보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로 옮기는 것이 우애 국가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애의 이념을 더 넓게 바라보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성립된다 하겠습니까. 인간이 자립하면서도 자연과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지는 인류 최대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계화가 작동하지 않고 내셔널리즘이 고양되고 있는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애 이념에 따라 지역기구를 창설하고 구성 국가들의 상호 이해의 장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지역주의(regionalism) 이념에 따라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분쟁은 철저한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행사 는 결코 분쟁의 본질적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애 이념에 기초해 동아시아 부전 공동체를 꿈꾸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ASEAN) 10개국은 이미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를 ‘운명 공동체’라 하면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에 일·한·중 세 나라가 더해지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이 형성됩니다. 중국은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으니, 일본과 한국의 태도가 남았습니다. 저는 일본이야말로 그 선두에 서서 깃발을 흔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다른 아닌 일본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입혔고, 이후 7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정한 화해가 달성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70년이란 획을 맞이하던 해에 일본이 역사를 응시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고통 받은 사람들과 국가들에 대해 분명히 사죄와 보상을 할 수 있었다면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해 크게 전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총리 재임 중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일·한·중 3국 협력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소

기의 목적이 아직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일·한·중 정상회담이 차차 재개되어 일·한·중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반도는 평화를 향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몇 차례나 열렸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도 얻어지지 않았으니 회담이 결렬됐다, 실패했다는 식의 부정적 논조가 눈에 띄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멈추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전히 풀어 양국 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결론날 일은 아닙니다. 양자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갈지 그 윤곽이 오히려 이번 회담에서 어렵פות이나마 드러난 만큼,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을 앞으로도 이어감으로써 그 사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미국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북미 관계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한반도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이야말로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움직임을 지원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제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100년 후를 바라본다면 한반도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 안에 어떻게 하면 북한을 편입시키는지 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 관계의 급진전으로 이 틀에 북한을 넣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공동체 의회를 설치하고, 그곳을 경제·무역만이 아니라 환경·에너지·교육·문화·안보 등 모든 분야를 논의하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오키나와(沖繩)와 제주도가 그러한 회의의 개최 지역으로 적합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 양대 강국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또한 북한이 경제적·정치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국가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거기에 성숙한 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커다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상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일어나 동아시아를 평화롭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목적을 다하고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전진·실현시키기 위해, 일본, 한국, 중국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초월한 인터내셔널 파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를 제안하면서 제 연설을 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 2

일한 협력으로 일조 국교 수립을!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

저는 올해 2월 6일에 <2019년 일본 시민·지식인 성명 '무라야마 담화, 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사죄하는 것이야말로 일한·일조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열쇠이다'>를 발표한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성명 원안을 기초했습니다. 발기인 21명 중 16명은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 게이센[惠泉]여학원대학 명예교수), 가스야 겐이치(糟谷憲一,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가노마 사나오(鹿野政直, 와세다[早稲田]대학 명예교수), 나카쓰카 아키라(나라[奈良]여자대학 명예교수),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토[京都]대학 명예교수) 등 2010년 <'한국 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의 일본 측 발기인입니다. 미타니 다이치로(三谷太一郎, 일본학사원 회원, 도쿄[東京]대학 명예교수)는 2010년 성명 당시 서명자였는데, 이번에는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이번 성명의 발표는 2010년 성명을 일본 측에서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 <'한국 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은 일본의 지식인 500명과 한국의 지식인 500명이 발표한 공동성명으로 병합과정과 병합조약을 준엄하게 단죄하였습니다. 성명은 "한국 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의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한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병합조약에 대해 "힘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은 병합의 역사적 진실"을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 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하여 일본 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 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로 덮어 숨긴 것이어서, 전문도 조약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 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는 것이 성명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따라, 성명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 병합조약의 무효와 관련되는 조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를 한국 측 해석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인식하도록 일본 정부에 제안한 것입니다.

2010년에 이러한 인식, 주장을 내놓았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 일한 관계가 대립으로 치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극도로 협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의 호소에 대해 일본 기업에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총리와 외무대신은 일한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월 21일에 이뤄진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즈음해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12월 20일 한국 구축함이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공개적으로

비난·공격하는 방침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8일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양호한 관계를 언급하고 북한과는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삼겠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한국 무시·적대시 태도를 보여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는 일한 관계가 비정상적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의견을 표명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이며, 협력하지 않으면 양국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를 평범한 일본인,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 여행이 붐을 이뤄 일본의 생활과 문화를 재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수차례에 걸쳐 일어나 현재는 아주 어린 소년·소녀들의 K팝 열풍이 주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나라 사이에는 커다란 문제, 불행한 역사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협력할 수 없다거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친구가 되었지만 더 좋은 친구가 되고자 생각한다면 커다란 역사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역사적 문제란 식민지 지배 문제입니다. 1904년 이래 41년 동안의 군사 점령과 1910년 이래 35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가 일본 제국에 의해 한반도와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이것이 양국의 역사에 어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인의 역사 기억에서 이 일을 지울 수는 없으며, 일본인은 이에 대해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1945년 8월 15일자로 끝났지만, 일본인은 국가, 국민으로서 한국 병합과 조선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움직임을 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독립 조선의 한 나라인 대한민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일한조약을 1965년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1910년의 병합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하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합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식민지 지배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쌍방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기한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인식 분열은 극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무라야마·간 담화, 반성과 사죄의 새 지평

이러한 일한조약 아래서 일본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유지하고 경제적 관계를 체결하며 다각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1987년, 한국에서는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중지부를 찍는 민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가 되어서야 1995년 자민당-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 3당 연립내각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각의 결정에 따라 패전 50년 총리 담화를 발표하며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고 사죄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반성과 사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한국 사람들'을 향해 표명되었고,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조일 평양선언에서 '조선 사람들'을 향해 표명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 반성과 사죄는 획기적인 인식, 획기적인 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울러 병합 자체에 대한 역사 인식이 덧붙여져야 했습니다. 2010년 '한국 병합' 100년의 기회에 한·일 1000명의 지식인이 발표한 성명은 병합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우선 2010년 5월 10일에 발표 후, 이어 제 2차 서명자를 추가해

7월 2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명에 응답이라도 하듯 일본 정부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8월 10일 각의 결정에 따라 한국 병합 100년의 총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 서술을 통해 병합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명이 이뤄졌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일한 병합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아래 당시 한국 사람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인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 대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돌아보는 일에 솔직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것이 일본 국가가 '한국 병합'으로부터 100년, 식민지 지배의 종언으로부터 55년 만에 도달한 역사 인식입니다. 한국 국민의 비판에 촉구되고 스스로도 노력해서 손에 쥔 반성과 사죄의 새 지평입니다. 이 총리 담화에 바탕을 둔 행위로서 일본 정부는 일본 통치 하에서 조선총독부가 빼앗아 일본의 황실 재산으로 삼았던 '조선왕조 의궤' 등을 그 해 안에 한국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무라야마 담화와 간 총리 담화는 일본 정부가 한국, 조선에 대해 생각하고 시책을 취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본적 문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우리 성명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명을 발표해 보고 나서 분명해진 것은 간 총리 담화는 일본 안에서 일본 국민의 의식 속에 확실히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성명 그룹도 국회에서 사민당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의원에게 요청해 간 담화에 대해 한 번 질의하도록 했을 뿐이고, 2013년 일한 공동 성명과 간 총리 담화를 논한 책을 서울과 도쿄에서 출간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한편 (당시의)야당인 자민당은 간 총리 담화에 심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담화가 미래지향적 일한 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아사히》*, 2010년 8월 11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당시)는 "자기 믿음만으로 선의를 보여주면 된다는 건 큰 잘못, 어리석은 총리"라고 말했습니다(*《아사히》*, 2010년 8월 11일). 아베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초당파 의원



연맹인 창생 '일본'(創生'日本')은 총리 담화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민당이 집권 여당으로 복귀해 아베 2차 정권이 성립된 2012년 이후, 간 총리 담화를 철저히 무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먼저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간 총리 담화를 일본 국가의 방침으로서 재확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한국 측 해석의 채택 문제를 일한 외교 협상의 일정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측 역사가는 병합 과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소책자 형식으로 간행하여 병합조약의 무효성과 기만성을 백일하에 드러낼 생각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최종적 확립을 목표로 전진하는 가운데 일한 사이에 이미 생긴 문제나 앞으로 생길 문제는 모두 식민지 지배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따라, 양국 정부와 국민의 협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거의 75년이 경과했습니다. 침략과 지배의 실행자, 책임자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 피해자의 호소가 제기된다면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고통에 대한 조치를 생각하고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한·일 양국 국민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국민이 2015년 합의에 강한 비판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활동 종료를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연구를 추진하려고 있는 것은 의의가 깊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는 북한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 문제가 일한 간의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일한조약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2000년대에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20만 명이라 얘기되는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일한 사이에 격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대처를 필요로 합니다. 일한 양국 정부와 일한 기업이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밖에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도 존재합니다. 전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93세의 이학래(李鶴來) 노인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한의 현재 긴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3.1 독립선언> 100년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병합 후 10년의 고통을 거치면서도 조선 민족이 여전히 일본인에게 조선의 독립 요구가 일본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득하려 했던 것을 상기합니다. <3.1 독립선언>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에게는 민족의 정당한 번영을 획득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사악한 길에서 나와 동양의 지지자로서 중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 민족의 이 위대한 설득의 목소리를 듣고 동양 평화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일한·일조의 상호 이해, 상호 부조의 길을 걸어야 할 때이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대한 설득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일한 협력, '상호 이해'와 '상호 부조'를 통해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한 협력을 통한 북일 국교 정상화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지금만큼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미전쟁의 위기를 피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성공시킨 위대한 달성을 더욱 연장시키면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 제재와 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북일 국교 정상화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그렇게 하도록 호소하고 설득하여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는 이는 한국 국민, 한국 정부 외에는 없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단독으로 북미 양국을 중개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무사히 추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미-일-남-북 4개국의 기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기지가 존재합니다. 장차 어떠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을까요? 이 점만 보아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이 양국의 동반자로 남아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신속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2006년에 내놓은 '납치 3원칙'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는 없다는 제2원칙, 그리고 사망했다는 납치 피해자는 모두 살아있으니 당장 돌려보내라는 제3원칙이 국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납치 문제 교섭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베 3원칙'을 버리고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야만 납치 문제를 둘러싼 정상적인 협상도 가능해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쿠바 국교수립 전례를 본받아, 제재를 유지한 채 평양선언에 따라 국교를 맺고 대사관을 개설하고 즉각 핵미사일 문제, 경제 협력 문제, 납치 문제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재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교를 맺으면 북한에 대한 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북한은 되돌아 갈 여지없는 국제 환경 개선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미 협상과 남북 협상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한 협력을 통해 일조 수교를! 이것이 남-북-일 3국의 새로운 협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전 주일대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질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이하 하토야마 총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기초연설에서 정치 신념으로서의 우애, 한일 관계에서 역사와 외교 문제, 평소의 지론인 ‘동아시아 부전(不戰) 공동체’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한일 관계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정표에는 대표 질의라고 되어 있으나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의견과 질의이며 저로서는 오히려 하토야마 총리의 기초 발제에 대한 참석자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하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제안한 3가지 큰 문제에 대한 코멘트와 질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애(友愛)에 관하여

하토야마 총리는 그의 조부의 우애 정신을 이어받아 일관되게 자신의 정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지향한 3대 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만, 총리는 우애를 자유와 평등의 가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읽어보면 한일 관계의 어려움도 우애의 정신으로 풀어보려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힘의 정치의 현장인 국제 정치에서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애는 큰 정치가의 자질일 수 있으나 현실의 외교나 국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한 개념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에서는 국가 이익의 상호 인정 내지 상호 존중을 우애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하여

발표문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 관계에서 현 일본 천황과 무라야마 전 총리, 두 분의 과거사 반성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사 재임 중에 두 분과 역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현 천황이 일부 천황주의자(극우)의 역사관을 경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고 사회당 위원장 출신 총리로서 당연한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에 나타난 두 정상역사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중에 도쿄에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함께 조인한 협정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무라야마 담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같은 날 김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서 620여 명의 중·참의원에게 공동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간에 맺은 협정 가운데 두 나라의 정치인, 전문가, 일반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얻은 좋은 선례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아베 총리도 공동선언을 두 나라 지도자의 결단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셋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하여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에서도 EU처럼 부전(不戰)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연구와 실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ASEAN 10개국을 지역협력체(regionalism)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는 실제로 한·중·일 협력이 핵심이고 거기다 한반도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통일이 촉진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의 꿈’이나 아베 수상의 ‘적극적 평화주의’,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중·일 협력을 위하여 세 나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중국어 ‘선이후난(先易後難)’이란 말을 상기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취임 직후 총리 관저에서 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가 한·중·일 음악인들로 구성된 상설 오케스트라를 만들자고 한 제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때 총리께서는 대찬성을 하고 추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만난 한일 지도자들, 예술인들은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BESETO Orchestra에 대해 모두 찬성했습니다. 제가 정의화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단 고문으로 동행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정 의장이 공식 제안하고 화기에애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최근 중국에서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한·중·일 오케스트라의 화음(和音)은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입니다. 총리의 우애 정신에도 일치하며 만약 일본과 중국의 총리, 한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연례 정상회의에서 의제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동아시아 평화의 좋은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질의

첫째, 와다 하루키 교수께서는 무라야마 담화와 간 나오토 담화를 바탕으로 반성·사죄하는 길만이 한일, 북일 관계 개선의 키라는 점을 '2019 일본 지식인 선언'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제가 보기에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간 나오토 담화(2010)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간 나오토 담화를 읽어보면,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전의 무라야마 담화(1995)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메시지입니다. 주체도 객체도 없으며,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입니다. 같은 날 마주 앉아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 총리로서 온몸으로 진정성 있게 한 담화가 바로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간 나오토 담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무라야마 담화를 가장 구체화, 문서화한 것이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와다 교수의 글에서) 간 나오토 담화를 확인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현재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간 나오토 담화에 대해 일본 측은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와다 교수가 말씀하신) 그 해답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무라야마 담화, 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한 반성·사죄로서 한일 관계, 북일 관계를 진행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와다 교수는 무라야마 담화를 문서화, 구체화한 것을 갖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 2002년 평양선언('김정일 위원장-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조일 평양선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전인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한국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반성과 사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한국 사람들'을 향해 표명되었고,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조일 평양선언에서 '조선 사람들'을 향해 표명되었다.' -와다 하루키 교수 발제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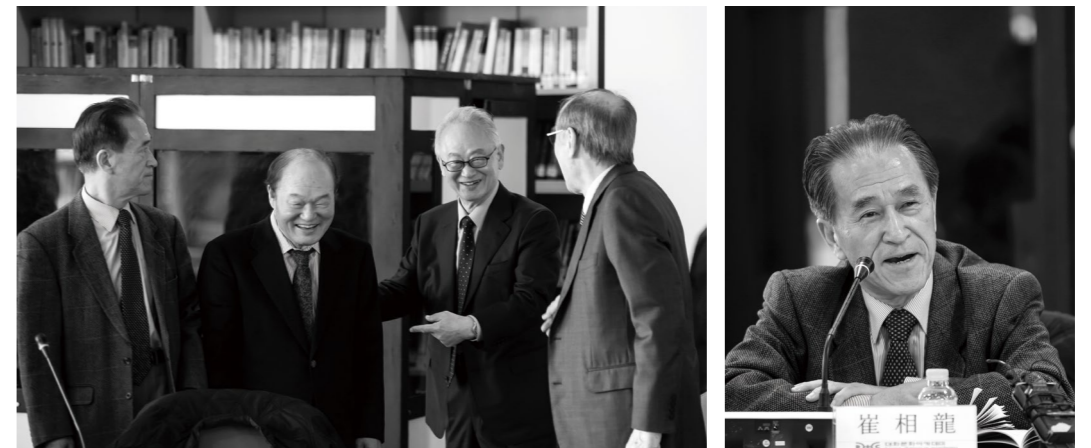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와다 교수께서 처음에는 이상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리얼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요컨대 '북일 국교 수립'입니다. 북일 국교의 정상화입니다. 아주 현실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베 총리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봅니다. 와다 교수께서 '일본이 한국과 협력해서' 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렇게 한일이 협력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일·한·북 관계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신 것을 지지합니다.

관련해 문제는, 두 선생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실천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 상대가 아베 지도부입니다. 아베 지도부를 상대로 두 분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건 무라야마 담화와 간 나오토 담화이지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차선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민당 정권의 수상입니다.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나, 여기 계신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보다, 현재 책임 정부인 자민당 총리가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실행한 것이 오부치 총리가 아닙니까. 작년 10월 제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때 일본 대표 참석이 공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잘 하면 외무대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베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가장 명백히 반대했던 사람이 20년 전 당시 아베 의원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념식에서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젊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지도자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베 총리마저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의미 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와다 교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념식 자리에 한국의 현직 대사가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북일 국교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명백히 하기는 쉽지 않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여기 계신 하토야마 총리, 와다 교수님 모두 북일 국교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밀고 나갑시다. 이것이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길이라고 봅니다. 하토야마 총리와 와다 교수님 두 분이 앞으로도 이 길을 열심히 지지해주시길 바라며,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현장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김대중·오부치게이조 공동선언>을 생각한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전 주일대사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중 10월 8일 오전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내각 총리대신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 대통령은 600명 이상의 일본 중·참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이 담긴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국빈 방문 준비 과정에 참가했고 특별 수행원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후 대사로써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잊을 수 없는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 특히 미래를 생각할 때 공동선언은 한일 두 나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협정이라는 것을, 두 나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은 11개 항목의 핵심 내용과 43개 항목의 행동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 연설은 김 대통령이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중·참의원에게 NHK 생중계를 통하여 공동선언에 바탕한 미래 비전을 정중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 두 문서에는, 역사와 외교 국가 이익과 국민 감정 등 지난한 문제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21세기 한일 관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와 사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 국민에 대한 희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두 나라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선언과 국회 연설의 내용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3가지로 나눠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냉전 후 한일 관계의 이정표

세계 정치의 차원에서 보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동서 냉전의 절정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국민의 격심한 조약 반대운동이 있었고 정부 레벨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배제되었습니다. 그 후 미소 냉전과 한반도 냉전의 이중 구조 속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냉전의 중심축을 형성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은 세계적 레벨에서 동서 냉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언은 국내 냉전으로 인한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양국 국민의 광범한 지지 속에 서명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1965년 기본조약 당시 유보되었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한국 정부의 '화해와 협력'을 상호 확인하고, 처음으로 두 나라 정상이 직접 협정 서명식을 가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논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일 관계사에서 1965년 기본조약과 1998년의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1965년을 기점으로 하는 '65년 체제'와 새로운 출발이란 의미에서 '98년 체제'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2. 상호인정과 가치공유의 좋은 선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헤겔은 현실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을 철학이라 했고, 인간과 국가 그리고 세계사에 관한 개념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낸 철학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바로 상호 인정(gegenseitige Anerkennung)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삶과 역사의 과정에는 인정 투쟁(Kampf um Anerkennung)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개인은 사생결단을 하게 되고 국가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겔은 개인이든 집단이나 국가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한 자립'을 서로가 인정함으로써 화해(Versöhnung)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짧은 현장 경험이지만, 상호 인정을 통해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외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구술사(oral history)에 두 분을 지켜본 저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부치 총리는 전후 한국의 산업화와 자주적 민주화 특히 평화적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이루어낸 김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비핵 3원칙을 지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상기시키면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일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체제 이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김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인권을,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고 높은 교육 수준과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균형 잡힌 교양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국민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3. 21세기 한일 관계의 초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공동선언의 정식명칭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일본어로는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입니다. 20년 전에 서명된 것이지만 일회적인 약속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협정입니다.

혁명과 전쟁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군사력의 조직적인 양극화였던 동서 냉전 등 극단의 시대였던 20세기의 황혼에 서서 21세기의 탈냉전·평화 시대의 한일 관계를 선취(先取)한 전략적 관점이, 이 공동선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적 과제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일본과의 공동선언에 이어 2000년 분단 체제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한국은 모든 국제 관계에서 갈등과 전쟁의 길이 아니라 교류와 평화의 길을 열어 갈 것입니다. 공동선언의 행동 계획에는 두 정상이 남북한 관계개선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공동선언의 약속과 고이즈미 정권 때의 <평양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일·북한 관계의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이며 그 길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의 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현대 국제 정치에서 평화 공존은 냉전 시대나 권력 투쟁 과정에서의 시한적인 이데올로기의 병존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제 교류를 매개로 한 평화적 상호 의존(peaceful interdependence)입니다. 요즘 너무나 가볍게 쓰이고 있는 '신 냉전'의 대립구도가 과거의 동서 냉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해 당사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구조적으로 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국 우선주의가 과거 동서 냉전 때의 양극화와는 그 양상이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평화론 즉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당사국 간에는 무역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전쟁으로의 이행은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 연구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제(통상) 평화론과 함께 '문화 평화론'의 유효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과 함께 문화 교류가 왕성한 국가 간에는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문화는 한편으로 soft power의 핵심이며 그 자체가 비군사적 영역이란 점에서 평화 지향적인 요인이며 다른 한편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가 강력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어 정체성의 과도한 형태로 나타날 경우는 갈등과 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는 문화의 폐쇄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상호 학습(mutual learning)의 과정이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와 평화 문화(peace culture)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듯이, 평화를 의식화 하고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공동선언과 국회 연설에서, 역사적 사실 인식 반성과 화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화해의 구체적 실천으로, 당시 한국 내의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한국 시장에 개방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 평화론'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방향 전환하는 공공외교를 통하여, 문화 교류로 평화를 실천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동선언 후에도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문화 교류는 상호 학습을 통한 상호 이해, 상호 인정의 연속성을 계승함으로써 한일 간의 갈등 요인을 크게 완화시켰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부터 매년 열리는 한일 문화축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마다 호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선언과 국회 연설에 담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 지도자들이 인내와 관용으로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나간다면 한일 간에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부영
사회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모임이 의도적이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 달 전부터 오늘의 모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간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쪽으로 파고가 높아졌는데, 의도치 않게 적시에 이 모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문을 갖고 와 주신 하토야마 전 총리와 와다 명예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신 박원순 시장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참석하는 것만으로 영광인데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용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함께 국가의 미래,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자는 취지의 평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의 모임도 그런 차원에서 좋은 자리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토야마 총리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공동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수백 년의 전쟁과 피로 물든 대륙이었고, 바로 직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만도 600만 명이 희생된 엄청난 비극 속에서 희망과 연대와 평화의 싹이 돌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야말로 한 사람의 상상, 즉 프랑스의 로베르 슈망 외무장관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이 점차 발전해 의회, 행정부, 사법부까지 한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유럽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환상, 꿈이었던 것이 결국에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패전국 독일의 철저한 반성과 전후 배상 등 조치들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것을 반드시 허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외쳤던 글, 그리고 와다 교수께서 말씀하신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공격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독립투사들이 가졌던 인식의 지평이 대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전에 최상용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북경-동경 상설 오케스트라 설립 제안을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북경 시장과 동경 도지사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화하는 한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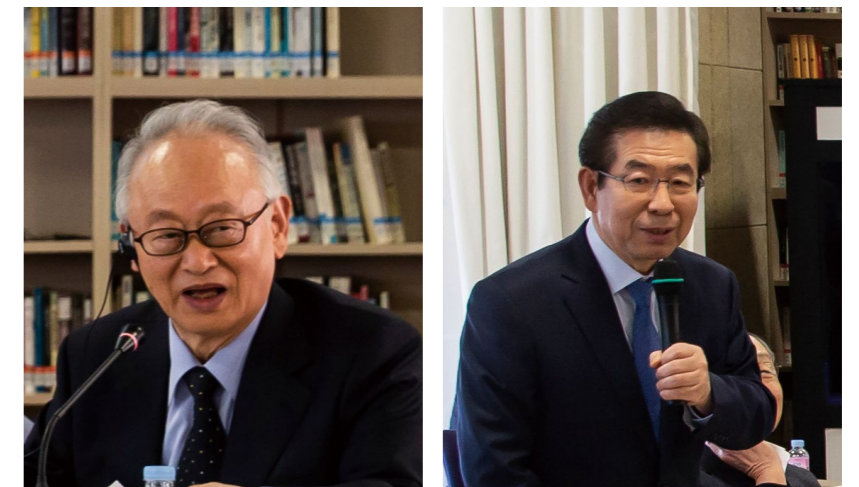
이부영
사회

오늘 하토야마 총리와 와다 교수의 발제는 일관된 내용이지만 그 안에 많은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토론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3.1운동 100주년을 전후해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예견하고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의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
전 문화부 장관

지금 한일 갈등의 문제는 사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이미 치유되고 새살이 돋기 시작했는데, 최근 다시 불거져 악화됐다고 봅니다. 오늘 하토야마 총리와 와다 교수께서 일본 천황과 역대 수상들이 계속 사죄했다는 점, 이것은 일본의 무한책임이란 점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안으로 하토야마 총리께서는 우애에 기반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와다 교수께서도 예전부터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해오셨고 이번에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를 통해 한·일·북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이미 19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한·중·일 공동 정상 회담을 하고 ASEAN과 함께 한·중·일 3국이 함께 모였을 때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각국의 젊은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활동을 하는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동아시아 비전 그룹의 공동목표는 '3P' 즉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발전(progress)이었고, 경제·금융·안보·환경·에너지·사회문화교육 등 6개 분야로 돌아가며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김대중 정부가 끝난 이후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와다 교수께서 일본과 북한의 수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오부치 수상, 고이즈미 수상에게 북일 수교를 제안했고, 동시에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장에게도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때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북한과 수교해 달라 적극 권유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악화일로로 갈까? 현재 양국 정부와 정치인 간에는 갈등이 첨예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통계를 보면 한국인 730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인 3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민, 시민 사회에는 어느 정도 비판 의식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나 정부 간 갈등만큼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과거사 사죄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 일본에는 아베 정부가, 한국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거졌다고 봅니다. 아베 정부의 우익화 국가주의가 나타남과 동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같은 해인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방문했고 일본 천황이 방한하려면 사과하고 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확산돼 오늘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아물었던 과거사 문제를 한일 양국이 각각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다시 상처를 파헤치고 덧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 새누리당은 '영토 수호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지만, 민주통합당은 '국면전환용'이라고, 통합진보당은 '입기 말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갑자기 강경 선화하는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장교 문제도 있고, 1965년 한일협정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의 국가 사죄와 법적 배상이 아닌 인도적 보상 합의를 해서 이후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이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 중심 세력들이 주로 과거 민족해방(NL) 운동권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다보니, '반미 반일', '우리 민족끼리'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는 잠재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 관계를 우선하다보니 한미 관계가 이완되고, 일본 패싱 문제도 제기되어(일본은 직접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 속에 있는데도) 한일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장집 교수는 이것을 가리켜 '관제 민족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 문제를 같이 봐야 한일 갈등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왜 가꾸 한국이 중국 편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이 일본을 배제하고 중국으로 기운다는 '중국 경사론'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말했을 때도 일본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함께 대륙 진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는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갈등에 있어 중국 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문제도 있는데, 푸틴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박근혜 정부는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할 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 일본은 러시아와 계속 영토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한미 동맹관계, 한일 공조관계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기우는 문제를 일본이 매우 우려하고, 그것이 다시 과거사에 대한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국가 주도 부정, 강제징용 보상 완료 주장,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문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과거사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을 논의할 때, 지역 갈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의식 속에서 한일 갈등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영
사회

역대 정권들의 한일 관계에 관련한 과정과 여러 가지 부침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 김성재 교수의 말씀에 이야기를 보탬 분 있으신지요?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전 산업자원부 장관

저는 지금의 한일 관계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체결이 이뤄진 '65년 체제'가 새로운 한일체제로 가는 진통기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진통입니다. 진통을 단순히 위기로만 여기면, 잘못하면 새로운 옥동자를 만들지 못하고 불임의 위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신 한일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민주화된 나라에서 지금의 65년 체제로는 가령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등 식민지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간 나오토 담화가 나왔을 때 저는 우연히 국내 언론과 일본 언론을 포함해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제가 ‘반보 진전’이라는 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참 인색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면 ‘십보 진전’이라고 하겠습니다.(웃음)

하토야마 총리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 와다 교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2010년 ‘한일 지식인 1000인 공동성명’과 관련해, 당시 우리가 와다 하루키 교수와 이태진 선생(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함께 일본 의회 중진들 사무실을 순방하며 공동성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간 나오토 총리 담화가 나왔는데, 그때 《아사히신문》에 하토야마 총리-센고쿠(당시 관방장관) 라인이 움직여 간 나오토 담화가 나오도록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토야마 총리께서 당시 우리가 만든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의식했는지, 의식을 하고 간 나오토 총리께 격려를 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201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합방’ 조약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8선언, 3.1 독립선언서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국 병합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문서는 김규식에 의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2015년 ‘한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500명 공동성명’에서 그것이 다시 지지되었고, 이번에 와다 하루키 교수가 주도해 만든 230여 명의 ‘일본 지식인 성명’에서 또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3.1운동 100년 ‘한일 시민 평화선언’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201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65년 체제’가 ‘신 한일체제’로 바뀌는 게 중요하며, ‘신 한일체제’에는 지금 공중에 떠도는 무라야마 담화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간 나오토 담화를 한데 모으는 동시에, 201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에서 주장했던 한일병합조약의 원천 무효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북일기본조약’이 한일기본조약과는 다르게 맺어지도록 한국이 협조하고, 그것을 계기로 한일기본조약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조약의 개정은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안심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고도의 지혜가 요구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저는 미래 지향이 아니라 과거 지향의 역사학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미래지향적 직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보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한일병합조약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지금도 와다 선생, 김영호 선생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웃음) 저는 일본을 질책하기보다, 서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최근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제가 주관해 기념논문집 《3.1독립만세운동과 식민지배체제》, 지식산업사, 2019)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또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지식인의 글 5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 세리카와 데쓰요(芹川哲世) 교수가 3.1운동 당시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 소설가, 시인 10명이 표명한 작품, 성명서 등의 글을 다룬 글이 있는데, 저는 그 논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한일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토야마 총리, 와다 교수의 노력이 아마 100년 후의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100년 후에 똑같은 후배가 나와선 안 될 것이다, 한 10년 안에는 다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토야마 총리께서 천황의 역사 인식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천황까지도 그러는데 왜 아베 총리와 같은 자민당계 우파들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나, 이 문제가 앞으로 한일 관계의 궁극적 극복을 위해, 김영호 선생이 앞서 말씀한 '옥동자 탄생'을 위해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알게 된 사실이라 장황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와다 선생 발표문 가운데 1910년 한국 병합 전에 1904년 '군사 강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러일전쟁을 일으키며 한반도에 진입한 일본군은 내부적으로 계엄령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일본 국제정치학자가 최근 밝혔는데요, 이런 연구 노력이 사실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맞는 데 토대가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일본이 1904년 군사 강점 전, 1902~1903년에 이미 한국 역사를 탈점했달까, 한국 역사를 일본 역사에 완전히 편입시켜버렸습니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3개월 전인 4월, 일본 역사학자이자 교육가가 일본 중등교육에서 역사교육 체계를 바꾸기로 제안했습니다. 그때 성립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역사, 동양사, 서양사 체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사, 지나사 두 가지였습니다. 일본 역사는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지나사를 동양사로 바꾸고 중국사에 더해 북방계 유목민족사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는 당연히 동양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사를 일본 역사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369년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했을 때 한반도 역사는 이미 일본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례하게도 조공을 안 바쳤다는 것이고, 이 무례한 몇 백 년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는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양사, 서양사는 지역구분이 아닙니다.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를 '동양'이라 하고, 그걸 건설하는 데 역사학자와 연구와 교육이 기여해야 한다는 게 동양사의 정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대동아 공영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군국주의 세력에 꺾였습니다. 일본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성공했다면 그 뒤의 전쟁 책임도 묻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910년 전후 한국 병합에 관한 일본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 기사를 분석하면서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침략이란 말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중등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체계 수정의 제안은 1894년 청일전쟁 직전이지만, 실제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이 시행된 것은 1902년 말~1903년부터였습니다. 러일전쟁, 군사 강점 전에 역사 강점부터 했고, 조선총독부의 국사는 일본사에 조선 역사를 부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적어도 아베 총리와 그 지지 세력에게는 그런 역사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이들이 조선, 한국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왜 사죄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학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앞으로 몇 년간은 이 문제를 극명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좋은 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일 갈등의 궁극적 극복을 위해서는 역사교육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남은 시간 역사학자로서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컨설팅위원장

두 분 발제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사정을 보면 이미 중의원에서는 개헌선을 넘었고,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지금 분위기라면 개헌선을 또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이미 공헌한 바와 같이 개헌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일본 평화헌법은 전쟁 가능한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동아시아의 집을 짓는다? 일본 자체의 모든 변화를 어떻게 동아시아의 집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두 분 말씀은 아주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이 통일된 후 이웃나라와의 관계에서, 특히 EU 내에서 독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오데르-나이세(Oder-Neisse) 강을 경계로 이동지역을 폴란드에 양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라는 성경 말씀처럼, 독일의 통일에 대해 이웃나라가 의혹을 갖지 않도록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EU 내 확고한 위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도 교과서에 집어넣고, 동해 이름도 안 바꾸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너무 이상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큰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일본이나 한국이나 정치인이 전부 ‘좀비’가 되어갑니다. 일본만 해도 옛날 다케시마 같은 큰 정치인이 있었을 때는 한쪽에서 ‘다케시마의 날’ 같은 걸 만들면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일본 정치인도 모두 포퓰리스트로 유권자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대중들 비위 맞추고 극단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니 점점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데 영향을 줍니다. 큰 정치인이 탄생 안 되는 이유는 선거법입니다. 1인1표제는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선거법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 자민당은 아마 그런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좀비 정치인’이 많아지는 일본 정치권에서 하토야마 총리처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겠는가. 회의적입니다. 국내 정치를 바꿔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한일 관계도 더 나빠질 것이고,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는 연목구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반도-일본의 신 한일 체제

이부영
사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더해 북미 수교, 북일 국교 정상화까지 보고 큰 그림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백낙청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코멘트도 있고, 현실적으로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일 두 나라의 정부 간 관계가 나쁜 데 비해 국민들 간 관계는 좋은 편이고 그나마 한일 관계가 그만큼 유지되는 데는 두 분 같은 분들, 또 이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일본의 지식인, 정치인, 시민들의 노력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김영호 선생께서 지금이야말로 ‘신 한일체제’를 만들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동의합니다. 한때 좋던 관계가 다시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것, 혹은 그동안 대체로 나빴다가 대체로 좋았던 관계를 개선해보자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려면 ‘신 한일체제’라고 할 때 ‘한’에 한국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도 포함된다는 양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를 이야기했을 때, 또는 3.1운동 선언문에서 동양 평화를 이야기했을 때, 한·중·일 동양 3국에서 ‘한’은 분단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비록 위기에 처했거나 식민지였더라도 통일 조선을 염두에 두고 동양 3국의 평화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신 한일체제’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북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북이 참가하기 전에는 우리끼리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끼리 계속 해나가되, 이것이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체제가 되려면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식의 새로운 ‘신 한일체제’를 만들 적기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와다 선생이 일본이 태도를 바꿔 옳은 길로 들어서려면 한국 국민의 위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우리가 아무리 설득의 목소리를 높여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종찬 선생의 현실적 지적에 동의합니다. 3.1운동 때도 우리가 참 훌륭한 이야기를 했지만 독립을 못해서 설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창의적인 한반도 대통합을 추진해나갈 때에야, 비로소 일본 정부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런 설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령 아베 총리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계산된 태도이겠지만,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가고 거기에 북미 관계가 따라 오니까 아베 총리가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새로운 길을 설득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이 제안하신 북일 수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을 설득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인, 조선 민족이 우리가 무시하고 깃밟아도 좋은 그런 민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부영
사회

백 선생 말씀을 더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논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
일본연구소 연구부장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일 관계, 북일 관계,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보는데요. ‘역사가 만드는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과제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도전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두 개의 ‘전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북아에 삶의 터전을 잡은 모든 생명체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불명예를 강요받는 현실은 이 두 개의 ‘전후’가



극복되지 않은 채 서로 중첩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전후’는 ‘한국전쟁 이후’가 휴전 또는 정전의 이름으로 전쟁에 준하는 체제로 계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냉전이란 이름으로 지속되고 탈냉전 이후에도 아시아에서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정전협정 체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기원은 1953년입니다. 후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195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 1953년에 시작된 역사입니다. 이 두 개의 전후가 중첩되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상이 한반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해체에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의 극복이 일본의 과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가 한일 관계에 적용된 것이 바로 ‘1965년 체제’이며 그 극복이 진정한 전후의 극복이라는 점을 일본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정전협정 해체에도 일본에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후방기지로 편입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전쟁은 근대화와 식민지 유산의 극복 방법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에서 자주적 근대화는 청일전쟁으로 왜곡되었고, 조선은 러일전쟁 결과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국전쟁의 종식은 단지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포함한 세 가지 전쟁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일본은 동북아 세 개의 주요 전쟁에서 두 번은 직접 당사자였고, 한 번은 후방기지로 관여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두 가지 전후의 극복은 일본이 담당자로서 맡아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휴전협정 체제 해체를 목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개시된 2018년에 1965년 체제의 결정적 한계가 드러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가지 전후의 극복이 한국·북한·일본의 공동책임이므로 한일 관계, 북일 관계, 남북 관계 이 세 가지 양자 관계가 동북아 평화의 핵심이고, 저는 이러한 한국·북한·일본의 핵심 삼각형이 동북아 평화의 핵심 삼각형이라고 봅니다.

한편 북일 관계 정상화는 1988년 ‘7.7선언’이 제시한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라는 생각도 듭니다. 7.7선언은 남북 화해와 동시에 남북 교차 승인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국교를 맺은 것에 비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맺지 못한 것이 그 한계였고, 이러한 북미 관계, 북일 관계 개선의 실패가 북 핵미사일 위기의 기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북 비핵화는 미국·일본과 북한 간 관계 개선과 등가물이라고 봅니다. 북미, 북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안착시키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 없이는 이런 과정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서 북일 관계를 중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노이 북미회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2월 말 하노이 북미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일 관계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월 4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일본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요. 2월 15일에는 《교도통신》에서 납치 피해자로 일본 정부가 인정한 다나카 미노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일본 외무성 당국자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일본은 하노이 합의를 지켜보면서, 거기부터 북일 정상회담에 나설 기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딱히 업적이 없었던 아베에게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베는 하는 수 없이 전통적인 대북 압박으로 돌아섰고, 이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 3월 8일 격렬한 언어로 일본을 비난했던 북한



《로동신문》기사의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북일 사이가 더 벌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북일 사이에서 중재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즉 한국이 할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계산에만 매달려 어떻게 아베 정부를 이끌 것인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투 트랙’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투 트랙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투 트랙은 ‘역사 트랙’과 ‘미래 트랙’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길도 같이 제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극복의 길은 새로운 역사 선언을 하는 데 있습니다. 즉, 1965년 체제의 극복입니다. ‘한일 관계 1.0’을 ‘한일 관계 2.0’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백낙청 선생의 말씀처럼 ‘한일 관계 1.0(즉, 북을 포함한 ‘한반도-일본 관계 1.0’)'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65년 체제 극복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우선 1965년 협정이 현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1965년 기본조약에서 역사 문제는 전혀 안 다뤄졌다는 것을 일본에 정당하게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65년 협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왔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90년대 이래 1993년, 1995년, 1998년,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법적 배상은 아니지만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실시해왔던 여러 가지 실질적 노력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1965년에 다뤄지지 않았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조선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적이었고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서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상 의무는 일본이



그간 취해온 여러 경제적 조치를 실질적 법적 배상으로 간주하고 한국 정부의 그간 노력을 함께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서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2002년 북일 공동선언에 입각해 북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을 때, 일본이 경제협력이란 명목으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65년 체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고, 북일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과 일본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북한과 일본에 적용한다면, 일본이 경제협력 명목이 아니라 배상이란 명목으로, 그리고 배상 명목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배상의 명목으로, 역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한국, 북한, 일본의 선언을 합쳐 ‘남북일 선언’이라는 새로운 역사 선언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길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길을 제시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인 해결에 나서도록 추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래 목표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금지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것이고, 아직은 ‘비핵 3원칙’에 입각해있는 일본을 계속 여기에 머무르게 하고, 동북아에서 비핵지대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냥 꿈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비핵화 관련해서, 한일 간에는 1998년 공동선언이 있었고, 남북 간에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작년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한일, 남북 간에는 사실 비핵평화 원칙이 확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일도, 북일 공동선언에서 당시 핵문제를 국제법에 준수해 해결하고 미사일을 동결 선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을 북일 간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재확인한다면 한일, 남북, 북일 간 공히 비핵평화의 가치가 공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 적어도 남북일 사이에서는 비핵무기금지대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의 목표와 과거사 해결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평화헌법의 전망

이부영
사회

구체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이종찬 선생께서 일본의 평화헌법 문제가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최근 한일 시민사회 사이에 그런 문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 시민운동 쪽에서도 개헌과 관련해 위기감을 갖고 올 5월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 집회를 할 모양입니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늘 큰 그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는 시민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문제들로 한편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사회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바꾸려 하고 전쟁국가로 회귀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과 2017년 촛불항쟁을 경험했고 이후 국제 토론회를 연 바 있습니다. 그때 일본 측 참가자가 있었는데 저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분들의 슬로건이 '일본의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총quel기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유사한 촛불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지난해 겨울, 박근혜 정부 퇴진행동의 대표 두 사람이 LED 촛불을 5000개 이상 구입해 일본에 지지 연대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오사카와 그 주변 도시를 돌아봤는데 현재 지방선거 벽보가 붙고 있었고, 후보 연설 장면도 목격하고 왔습니다. 아까 이종찬 선생께서 말씀했지만 7월 참의원 선거가 있고, 두 선거를 통해 아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저희는 의심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밀어붙여 평화헌법 9조를 부수려 하지는 않을까. 그런 전망 속에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에 대한 불안함은 있습니다.

또 한일 간 지식인 선언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시지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 지식인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지금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 한일 교류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만일 평화헌법 9조가 부서진다면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이것이 어떤 '역작동'을 할 것인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그림과 함께 현재 일본의 현실적 조건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본 언론의 극보수화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완전히 보수를 대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현실적 조건이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큰 그림이 가능할까요.

이부영
사회

이야기가 상당히 깊이 진행됐는데, 하토야마 총리, 와다 선생이 중간 답변을 해주시고 토론을 더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굉장히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라든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실현 등을 생각했을 때 손쉽게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대일로'라는 것의 구상 목적은 주변 각국의 번영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일본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현 아베 정권은 이러한 우애 사상에 입각한 동아시아 공동체 등의 구상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제 때(제가 총리였던 시절)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발표했지만, 간 나오토 총리 때 이후 동아시아 공동체란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사태는 한층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위대한 업적이란 처음에는 유토피아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화 할 것인가 유토피아로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현 정권이 공동체라는 발상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보기 보다는 이러한 것을 지탱하는 민간의 힘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라는 것도-이미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말씀했는데-의미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의 공동체를 부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사사롭고 작은 움직임이지만 4년 연속으로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 면류공동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웃음) 동아시아는 면이라는 하나의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면 문화를 무대로, 면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통해, 각각의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고 즐기고, '다른 건 참 좋은 거구나' 서로 느끼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구나' 하고 기쁨을 나뉘 갖는 등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때이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 혹은 지역 대 지역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추진하고 주제별로 다양한 민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애와 박애라는 것은 물론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박애라는 말에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 받는 사람 측이라는 일종의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애는 양쪽이 함께입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는데 '상호 존중, 상호 이해, 상호 부조'인 것입니다. 이런 발상은 박애보다 우애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진 민간 차원의 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그 움직임들이 궁극적으로 정치를 움직이고, 양국 정상 간 신뢰가 구축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베 정권이 개헌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여러 말들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개헌을 하려면 일본 국민의 과반수가 개헌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이 (개헌안 발의 가능성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획득한다 해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국민투표에서) 개헌에 찬성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봅니다.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헌법 9조를 움직이려 할 때 지금 일본 국민의 여론을 보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방과제 역할을 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선거 제도가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소선거구제에 찬성한 제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네요.(웃음) 다만 소선거구제의 좋은 점은, 각각 선거에서 51대 49라는 아주 근소한 차라 하더라도 집권한 이상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실현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민 여러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 긴장감을 항상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소선거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제도로 복귀시킨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연립정권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립정권이 된다면 국민 여러분에게 그 정권이 뭘 할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립 양태에 따라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선거 제도를 바꾼다는 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현 자민당에 불리하게 바꿀 리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현재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은 야당끼리 서로 집안싸움을 한다는 데 더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북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아베 총리의 북에 대한 태도가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변화했다기 보다는 미국으로 인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원래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일 국교 정상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게 된 것은 주변의 상황, 즉 문재인 대통령의 대단한 노력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2차례 개최된 등의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몇 번이고 회담을 해나가야 합니다. 회담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북미가 서로 과격하게 행동할 리 없기 때문에, 회담을 해나가면서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리드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가 북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발상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습니다. 발언이 길어졌는데요, 많은 말씀 들으면서 공부 많이 되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 헌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은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아베 총리는 당초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 협상을 성공시키고 그 기운에 힘입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북방 4도 반환은 포기하고 2개 섬이라도 우선 반환을 성공시키려 했고, 그렇게 얻은 지지율로 헌법 개정으로 나아가려는 의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베 총리의 생각은 그런 시기였지만, 러시아의 결단이 너무 늦어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외교적으로 막다른 곳에 와있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개정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바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은 아베가 납치 문제를 가져가면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기정 교수가 아베와 북의 관계에 대해 전망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화풀이하는 상태인 듯하고, 말하자면 '조선 사람은 다 골치 아프다'는 식인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막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토야마 총리도 말씀했고 저도 줄곧 그것이 새로운 '유토피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세안+3'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중국과의 충돌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자 했는데 중국은 바라지 않아 파탄이 났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동북아 공동체 위원회까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노력했지만 중간에 사라져버렸죠. 동북아 공동체가



북한과 충돌했고 결국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역주의적 생각이라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고, 그게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입니다. 북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표현하고 핵을 포기할 테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므로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완전히 새로운 안보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를 진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교섭 측면을 본다면 더욱 더 지역주의, 지역안보, 공생을 구상해야 합니다. 일본의 상황에서도 밖으로부터의 커다란 자극입니다. 그런 상황을 활용해 일본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백낙청 선생께서 그에 대해 '자기 일은 자기가 생각해야지'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웃음), 한국이 주는 도움이라는 것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자 라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건 아베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베는 트럼프와 함께 북을 철저히 목 졸라 핵을 없애자는 식으로 궁지로 몰아가면 체제 붕괴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봤겠지만, 트럼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아베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환생'해 다시 생각해줄길 바라지만, '아베 원칙'이란 게 여전히 있어 본인은 그걸 바꾸지 못하나 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일본은 자기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바꾸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6.3 세대

이부영
사회 1965년 한일협정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항의 반대운동을 벌였던 6.3세대 대표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 격인 김도현 선생의 말씀을 청해 보고 싶습니다.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좀더 한일 관계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다가(한일협정 반대운동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해 50년 만에 졸업했고(웃음) 형무소에서 2~3년 살았습니다. 그 이전인 한 100년 전에는 우리 마을의 일족 사이에서 독립운동 서훈자가 44명이 나왔습니다. 불과 100여 호 되는 안동의 조그만 마을에서 독립운동 서훈자가 44명이나 나오려면 근 50여 년 간 감시, 투옥, 체포, 고문, 망명, 빈곤 등이 일상이 되어야 했을 텐데요. 또 그 한참 전 400년 전인 1591년, 저의 15대 선조는 풍신수길(豊臣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 태합(太閤, 다이코)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선조의 국서를 갖고 갔는데 그 국서에는 ‘친목을 도모하자(講信修睦)’라고 쓰여 있었으며 ‘화호(和好)’의 양국관계를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알다시피 풍신태합의 침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본 사람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맹세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절대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 드립니다.(좌중 웃음)

오늘 와다 선생께서 1965년 한일협정 기본조약 2조에 대한 인식을 한국에서처럼 일본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고, 특히 이태진 교수는 협정 체결 당시 여러 사정을 들면서, 일본에도 이 같은 학적 업적이 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북일 수교를 위해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일본을 괴롭힌 적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다가 교수의 《원구(元寇)》라는 책을 보니 13세기 고려인들이 몽고와 한패가 되어 일본인들을 괴롭혀 최근까지도 일본 어린이들은 일본말로 ‘무쿠리 코쿠리’ 라는 말을 들으면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도 이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웃음) 그러나 고려 민중은 끈질기게 몽고에 저항했다는 것을 일본인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선 국가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재심 청구가 유행인데, 우리 일족이 요새 말로 하면 불법 체포, 고문에 의한 증거 등으로 재판 받고 사형 당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심 청구나 보상, 배상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일본 국민들은 배상 청구도 재심 청구도 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망각과 관대함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었으면 합니다.(웃음)

우리 선조들은 일본인과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럴 도리가 없고, 저는 한일이 친목과 우애의 국가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

장기적으로 북일 수교나 동아시아 공동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악화하는 한일 관계입니다. 오늘 몇 분이 양국의 국민 사이는 좋다고 했는데 저는 국민 사이도 상당히 나쁘다고 봅니다. 통계로 보면,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는 아베를 지지하는 험한 세력이 많고, 우리 입장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기상 그렇게 (감정이)좋은 때가 아닙니다. 하토야마 총리, 와다 교수는 일본의 지성인이면서 동시에 용기를 발휘한 것일 텐데, 두 분의 말씀이 일본 내에서 지지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점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한일 회담에 반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그 연배이고(이른바 ‘6.3세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일 관계가 나쁠 때마다 일본 내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선언서 같은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기를 내어 일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자꾸 일본 국민들에게 깨우쳐라 이래라 저래라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한 방법으로, 한국의 지식인들이 오늘 하토야마 총리께서 말씀한, 곧 은퇴하실 일본 천황의 방한을 요청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그간 언행을 보면 한국에 우호적이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훌륭한 말씀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초청을 계획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우리 지성인들이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 환영 요청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옥먹을 수 있겠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천황이 오시면 제일 좋고, 만일 못 온다고 해도 한국의 지성인들이 천황을 초청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일본의 양식 있는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자꾸 여기서 학문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 액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행동에 나서야 오늘 방문하신 두 분도 힘이 날 것입니다.

올림픽과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

이부영
사회

오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도쿄와 베이징에서 연이어 열리는 이번 올림픽이 동아시아,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가 다시 퍼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일 간 더 깊은 관계, 북한 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일 갈등의 뿌리와 해결 방향에 대한 발제자 두 분의 진단에 공감합니다. 한국도 최근세사에 있어 다른 나라에 상처를 준 역사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대표적 학자가 그 나라에 가서 하토야마 총리나 와다 교수와 같은 사죄와 반성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윤영오 교수의 말씀처럼 두 분은 역시 일본 내에서 소수 의견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되풀이되었지만 거듭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치인 뿐 아니라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사죄와 반성이 내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베가 돌변해 우리를 만족시킬 담화를 낼지라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영구히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앞으로 그런 담화가 있다면 국회 의결 정도는 거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한일 역사 교과서 문제를 부활시켜 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정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 공동교과서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70년에 걸친 다각적 논의가 있었고, 폴란드와 독일 간 역사 공동교과서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일 관계: 100년을 모색한다'인데, 우리도 100년이 걸려도 좋다는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한일 간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해 한일 청소년협회를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독불 교과서 문제를 보면, 1963년 독불 간 우호조약인 엘리제 조약에 의해 청소년 교류가 제도화되었습니다. 40년간 줄곧 교류를 이어오다가 2003년 청소년 대표 550명이 모여 기성세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 공동교과서 제작 요구를 결의했고, 당시 자크 시라크, 게르하르트 슈뢰더 두 지도자가 합의해



공동교과서 제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한일 간 역사 문제 역시 기성세대들이 개입돼 있으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는 기성세대가 풀어야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청소년들 쪽이 오히려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한일 간 청소년 교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약 1500명 정도 교류를 하고 그쳤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40년간 연 5만~10만 명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게 의식 속에 쌓여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장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한 정치, 경제, 안보 현안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면서 함께 장기적 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연히도 동아시아에서 연속으로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도쿄 올림픽(2020년)-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항저우 아시안게임(2022년)-나고야 아시안게임(2026년) 등입니다. 우연이지만 축복이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경제 중심 부진 공동체' 말씀도 했고 최상용 박사도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스포츠 행사의 상호 부조 관계가 있으면 무력 충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도쿄 올림픽 때 북한을 초청해 협력할지, 나고야 아시안게임 때 북한을 초청, 지원하면서 일본이 원하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데,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단순히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되는 지정학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우연히 마련된 상황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현실적으로 많은 비관적인 전망과 장애가 있음에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작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17년 북핵 문제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이것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게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이후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스포츠 행사들과 궁극적으로는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제안 등의 과정을 통해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한 축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이후 삼지연 악단 공연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90세 넘은 북한 최고 정치인의 안에 무슨 마음이 있기에 저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까 생각했고, 결국 식민과 분단과 냉전의 모순을 고난의 행군을 통해 극복해온 한 인간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최근 한·중·일 문체부 장관 회의에서 우리 도종환 장관이 남·북·일·중이 함께 하는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제안했는데, 일본 측 대표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경 올림픽 메인 홈페이지에 북한이 접속하는 것을 상당 기간 금지했다가 올림픽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다시 재개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 오히려 조일 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일본의 마땅한 자세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생깁니다.

새로운 백년을 모색하는 과정에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축이라면 동북아 평화시민연대라고 봅니다. 민의 토대 없이 이를 수 없는 꿈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고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동북아에서 진행될 일련의 올림픽 행사에 거는 한 가지 큰 기대는, 그동안은 올림픽 스포츠 행사가 특히 동북아에서 국가중심주의에 기반한 관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평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결국 동북아 관제 민족주의, 신 냉전주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판문점 체제의 연동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대 냉전의 분단선'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의 꿈까지 우리가 함께 쫓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 동북아 공동의 집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그 토대가 되는 동북아 시민평화연대가 굳건히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이종오

경제사회포럼 이사장
전 대통령자문정책위원장

이홍구 총리께서 서두에 오늘의 대화는 논쟁은 아니고 화기에애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우애의 화두를 꺼냈는데, 오늘의 대화는 참석자 모두 우애 속에서 건설적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봅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입체적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백년을 모색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확히 봐야 하고,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만 들여다보면 건설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걸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 미래를 건설해 나가자는 시간적 축이 하나 있었고 한일 관계가 한·일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한반도라는 공간의 확장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미국, 러시아, 동아시아 전체 공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일 관계의 단선적 관계도 정확히 풀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지역 공간 전체의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과 북에 일본, 미국까지 포함하는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다 선생의 말씀 중 인상 깊었던 것이, 북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문제가 이것을 추동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낙청 선생은 남북 관계가 북일 문제와 북미 문제 추동의 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자 간 긍정적 관계가 그 다음의 관계로 퍼져나가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고초를 겪으신 선생들의 말씀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우월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며 용서, 화해,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다 교수, 하토야마 총리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런 화해와 용서의 과정은 상호 과정이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유럽 공동체처럼 동아시아 공동체적 질서,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꿈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유토피아'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을 도외시하면 유토피아로서만 끝날 수 있지만, 와다 선생은 다시 구체적 문제로서 유토피아와 현실의 입체적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과거와 미래, 단선적·표면적 관계에서 입체적·종합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베 정권도 있고, 한국의 개혁 정권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현실에서 풀어가야 할 고리에 대한 건설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생각, 무엇보다 우애에 가득 찬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영

사회

사회자로서, 먼 곳까지 시간을 내서 와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못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뜻 깊게 만들어주신 하토야마 총리, 와다 교수, 최상용 교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만한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기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씨앗과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백년의 모색'이라는 큰 제목을 걸었는데,

이런 의식으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정부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곤란하더라도 시민 사회와 국민들이 나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발언 기회를 다 못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모임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토야마 총리, 와다 선생과 이야기 하면서 오늘의 모임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이 중심이 되어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오늘 대화모임의 핵심이 이제는 우리 양심적 지식인들이 나서 새로운 한일 체제, 동북아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명단 *가나다순

| | | | |
|-----|---------------------------|------|------------------------------|
| 김도현 | 전 문화체육부 차관 | 이종오 | 경제사회포럼 이사장, 전 대통령자문정책위원장 |
| 김성재 |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전 문화부 장관 | 이종찬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
| 김숙은 | 전 성신여대 교수, 성악가 | 이태진 |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
| 김숙자 | 전 상명대 교수, 일본학 | 이하경 | 중앙일보 주필 |
| 김영호 | 단국대 석좌교수, 전 산업자원부 장관 | 이현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 김용복 |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원장 | 이흥구 | 전 국무총리 |
| 김진현 |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이홍정 |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
| 김홍수 | 목원대 명예교수,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 정강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 남기정 | 서울대 교수, 일본연구소 연구부장 | 지명관 | 전 한림대 석좌교수 |
| 박경서 | 대한적십자사 회장 | 최상용 | 고려대 명예교수 |
| 박상중 | 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무 | 와다 | 도쿄대 명예교수 |
| 박원순 | 서울시장 | 하루키 | |
| 박인규 | 프레시안 대표 | 하토야마 | 전 일본 총리 |
| 박태식 | 성공회대 교수 | 유키오 | |
| 백낙청 |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 | |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 |
| 유승삼 | 전 서울신문사 사장 | | |
| 유재건 | (재)여해와함께 이사장 | | |
| 윤경로 | 전 한성대 총장 | | |
| 윤영오 | 국민대 명예교수 | | |
| 이만열 |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 | |
| 이만열 |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전 경희대학교 교수 | | |
| 이부영 |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 | |
| 이삼열 |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 | |
| 이승무 | 한일반핵평화연대 공동대표,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 | |
| 이승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 | |
| 이시재 |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 |
| 이원영 | 수원대 교수 | | |
| 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 | |

| | |
|----|------------------------------------|
| | 開会の辞 |
| 56 | 李三悦(イ・サムヨル) 対話文化アカデミー 理事長 |
| | 歓迎の辞 |
| 58 | 李洪九(イ・ホング) 前 國務總理 |
| | 發題文 |
| 60 | 鳩山友紀夫 前 日本 總理 日韓関係の新しい100年を求めて |
| 66 | 和田春樹 東京大学 名誉教授 日韓の協力によって日朝国交樹立を! |
| | 論評文 |
| 70 | 崔相龍 高麗大學校 名誉教授 |
| 72 | 参考: いま, 「金大中・小渕恵三 共同宣言」を考える |
| 75 | 参席名單 |

開会の辞

李三悦（イ・サムヨル）
対話文化アカデミー 理事長

3.1運動100周年を記念して、韓日関係の改善と新たな創造的100年を模索するための対話の広場を開く運びになりましたことを大変喜ばしく思い、ご多忙な中でご参加下さったすべての皆さまに深く感謝を申し上げます。

特に、不幸だった韓日の歴史を反省しながら、未来志向的な正常化と善隣関係のために様々な努力を傾けて来られた日本の鳩山由紀夫元首相と和田春樹教授を基調講演者として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たおかげで、本日の対話が一層大きな意味を持て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

3.1運動の烈士たちが命を捧げて叫んだスローガンは、自主独立と東洋平和でありましたが、解放と同時に南北に分断されてしまった祖国は未だに70年前の戦争に幕を引く終戦宣言さえできておらず、韓中日の三国は和解と共生のための歴史的清算も果たせないまま、近いながらも遠い国というぎこちない関係から抜け出せずにいます。

24年前の1995年、解放50周年の節目に、私ども対話文化アカデミーは、日本の岩波書店と共同で、韓日間の和解と東北アジアの未来、平和と繁栄のための有識者の対話の集いを、ソウルと東京で催したことがあります。

その場に参加された、坂本義和教授、安江良介社長、大江健三郎ノーベル文学賞受賞作家は、韓国の姜元龍(カン・ウォニョン)、池明観(チ・ミョングアン)、金芝河(キム・ジハ)、曹淳(チョ・スン)などの先生方と共に、政治的に歴史問題を清算することは難しいとしても、知識人や市民社会が進んで謝罪と許し、和解と信頼の形成、ナショナリズムの克服を通じて、東北アジアの平和生命共同体を創り上げようと議論を交わし、その決意を固めました。

その際、歴史の清算と和解の道について語られた大江健三郎氏は、「まだ贖罪を果たせていない人と、まだ相手を心から許せていない人の間で、共同の未来に向けた努力が可能になってこそ、未来の夢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名言を残しました。

国家の利益にしがみついている政治家が成し遂げにくいことに、人類の共生・共栄を先に考える良心的な知識人や宗教家が先立って取り組むことで、平和がつくられるという歴史を、私たちはヨーロッパ共同体の形成過程からしっかりと目撃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本日お話して下さる鳩山由紀夫元首相は、すでに2015年、西大門刑務所の跡地を訪れられ、柳寛順(ユ・グァンスン)の監房を前にひざまずいて敬意と心の痛みを表されましたが、このことは、1974年にドイツのヴィリー・ブランド(Willy Brandt)首相が、ポーランドのユダヤ人虐殺記

念碑の前でひざまずいて謝罪したことにも劣らぬ感動的なこととして、韓日間の和解と平和を植える種になったと考えております。

和田春樹教授が主導された226人の知識人宣言も、韓日両国の知識人や市民社会の連帯と協力を構築する上で重要な動力になるであろうと信じています。こうしてせっかく貴重なお二方をお迎えしています本日の集いが、これまで何度か試みられたような議論の広場にとどまることなく、大江健三郎氏の訴えのように、共同の未来に向けた協力の広場をつくるきっかけになります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貴重なお話と対話を交わして下さい李洪九(イ・ホング)総理、崔相龍(チェ・サンヨン)大使をはじめ、ご参加下さった各界からの重鎮の先生方に、心からの深い感謝の意を申し述べ開会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李洪九(イ・ホング)
元国務総理, ソウル大学名誉教授

「韓日関係、新たな100年を模索する」と題した対話の集いに参加されたすべての皆さま、特に、日本から遠路はるばるお越しいただいた長年の友人、鳩山首相と和田教授に心からの歓迎を申し上げます。北朝鮮の核を含む朝鮮半島の平和問題と、アメリカと中国の間の政治・経済的な覇権争いに伴った東アジアの平和問題に、賢明に取り組むことのできる韓日の協力がいつにも増して必要とされる時期にあります。

とりわけ、3.1運動100周年を記念する歴史的な転換点において、私たちが共に進むべき方向について共同の認識をつくるには、率直な対話が何よりも必要であると言えます。歴史は、結局は、各々の世代の存在意識と状況認識によってつくられて行くものであります。本日のこの集いでは、これまでの半世紀にわたり、韓日関係の性格や未来について格別な関心とリーダーシップを提供して来られた鳩山首相と和田教授の問題提起を中心に、活発な議論が行われま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鳩山首相は、4年前の2015年8月15日、ソウルで開かれた東アジア平和会議に参加された後に西大門刑務所の跡地を訪れ、植民地時代に獄中の苦難を味わった方々の霊前にひざまずいて礼を尽くしたことで、韓国の人々に深い印象を残されました。和田教授は、3.1記念日100周年とハノイでの米朝首脳会談を目前に控え緊張感漂う時期であった先の2月6日、日本の知識人226名による「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と謝罪を基に、韓日・朝日間の相互理解、相互扶助の道へ進もう」という旨の声明の発表を主導されました。本日、このお二方のお話を、ソウルの「対話文化アカデミー」で直接うかがう機会を得られましたことは、実にその意義が大きいと言えるでしょう。

お二人が準備されたスピーチの要旨を拝見しますと、韓日関係の過去と未来を左右する主体が誰なのかという核心的な問題に焦点を合わされたよう見受けられました。国家を代表する政府、それを構成する政治指導者や勢力なのか、それとも、一般の国民や団体活動に参加する市民たちなのかという問題から目を逸らすことはできません。日本の天皇が過去の韓日関係で取ってこられた積極的な立場が、果たしてどれほど韓国人に理解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に劣らず、日本の国民が理解または同調しているのが、はるかに深刻な問題だというご指摘は大変適切であると思われまます。執権層や各界指導者と、日本国民の間の「認識の乖離」という現象をどのように克服するかは、韓日両国がそれぞれ直面する共通の課題となっているようです。

鳩山首相は、慰安婦問題に対する2015年の韓日合意は「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だと釘を刺そうとする試みは、韓国民の感情としては受け入れがたいと言わざるを得ず、戦争での敗戦国や植民地統治の加害国は、事実上「無限責任」を背負い込むしかないとは認されています。したがって、慰安婦問題や戦争中の徴用工問題など、人間の尊厳と名誉に関わる問題は、韓日双方が新たな次元で共に悩みながら解決していくしかないと言われ指摘しておられます。そのためには、結局、「自立」と「共生」を可能にする友愛の精神を育み、それに基づく東アジア共同体を創設するべく、韓日が共に前進すべきという期待を込めた処方を出されました。

和田教授は、先月の「226人の知識人声明」に先立ち、2010年のいわゆる「韓日併合条約」100年の際も、日本の知識人500人と韓国の知識人500人の共同声明を通じて、その「併合」は法的にも規範的にも不当な「神話」に基づいたものであり、当初より無効であることを宣言しました。この間、和田教授が懸念しておられるのは日本政府の韓国に対する無視と敵視の態度であり、1904年に始まった41年間の軍事占領と1910年以来の35年間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韓国人の記憶は、請求権協定で解決されない「認識の分裂」を反映していると鋭く指摘しています。いわゆる「併合条約」の無効性と欺瞞性をしっかりと明らかにし、韓日両国の政府と国民は新しい時代に見合った隣人関係をつくって行くべきだということです。

3.1独立宣言が、朝鮮の独立は同時に日本を間違った道から救い出すことができるのだと強調していたことを想起しながら、安重根(アン・ジュンゴン)義士が1910年にすでに獄中で残していた「東洋平和論」のビジョンを、21世紀のグローバル化時代に合わせて具現することに、韓日両国の知識人たちと国民の知恵と意志を結集することこそが、今日の課題であります。

朝鮮半島の平和、東アジアの平和、ひいては世界の平和は、緊密に関連づけられている目標です。これらを成功裏に追求するための知恵と動力を、韓国と日本の指導者と国民が、とりわけ知識人がつくり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韓関係の新しい100年を求めて

鳩山友紀夫
前 日本 総理

「3.1独立運動」から100周年を迎えた今日、日韓関係のこれからの新しい百年を見据えて議論することは誠に意義深いことと存じます。また、そのような議論の場に、私をお招き下さったことに感謝申し上げます。

南北関係がこの数年でどのように動いていくかさえはっきりと予測しがたい中で、百年先など見当もつかないことは事実ではありますが、過去の延長線上ではなく、日韓関係がかくあってほしいと期待を込めて眺めることは意味のあることです。そして日韓関係の今後百年を語るには、やはりまず過去百年を総括することから始める必要があります。

文在寅大統領は「3.1独立運動」100周年の記念式典で、「歴史の立て直しこそが重要であり、親日の残滓清算が課題だ」と述べられた一方で、「隣国との外交で葛藤の要因を作ろうというのではない。親日清算も外交も未来志向的であらねばならない」と主張された。さらに、文大統領は「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日本との協力を強化する」と語り、「力を合わせて被害者らの苦痛を実質的に癒したときこそ、韓国と日本は心の通じる真の友人になる」と訴えられた。被害者らは明らかに最近の懸案の元徴用工や元慰安婦の方々を念頭に置いた発言ですが、これらの問題について直接的に言及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日韓の外交摩擦が強まることは極力避けたいとの思いを文大統領の演説に感じました。文大統領は立派な演説をされたと思います。この演説に対して、日本政府側がどのように答えるかが、今後の日韓関係の方向性を決めて行く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でしょう。

百年前は韓半島は日本の植民地でした。開国をした日本は欧米列強に負けてはならじと、遅ればせながら海外に進出して沖縄、台湾などと共に韓半島を植民地化したのです。その行動は大日本主義と呼ばれています。脱亜入欧の熱にうなされ、殖産興業、富国強兵の掛け声の下で大きな強い国を目指し、植民地争奪戦に加わって行ったのです。結果は満州事変から太平洋戦争へと戦線が広がり、歴史的な敗北を喫したのです。問題は、日本が大日本主義により一連の行動をとったことに対する、日本自身での総括ができていないことです。日本は東京裁判の結果を受け入れましたが、それは連合国側が行った裁判です。したがって、植民地化や戦争によって苦痛や悲劇を与えた方々に対する心からの謝罪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です。

大日本主義を遂行したのは政府でしたが、その当時の最高責任者は天皇陛下でした。その意味では、先般、文喜相国会議長が「慰安婦問題の解決には天皇の謝罪が必要」と語ったことは、

最高責任者が謝罪をすれば問題が解決すると述べたことであり、韓国側としては当然理解できる発言でしょう。ただ、日本人の多くは天皇陛下を尊崇しており、現憲法下の天皇陛下は国政に関する権能を持たない、あくまで象徴としての存在であり、したがって多くの日本国民が「文議長はそこまで言うか」と思ったのは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それでは天皇陛下は謝罪をさ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現在の明仁天皇はこの5月に生前退位されます。明仁天皇は1990年5月に、貴国の盧泰愚大統領が来日された際の宮中晩さん会において、「朝鮮半島と我が国との長く豊かな交流の歴史を振り返るとき、昭和天皇が『今世紀との一時期において、両国の間に不幸な過去が存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再び繰り返されてはならない』と述べられたことを思い起こします。我が国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この不幸な時期に、貴国の人々が味わわれた苦しみを思い、私は痛惜の念を禁じえません」と、謝罪の気持ちを述べられました。そして、その翌年の誕生日に際して、陛下がご自身の言葉で、「桓武天皇の生母は百済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続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韓国とのゆかりを感じています」と、本来ならばタブー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発言をなさいました。明仁天皇がご自身の出自に関することまで述べられたことは、いかに天皇陛下が現在のような日韓関係を憂い、豊かな交流を行っていた昔の日韓関係に戻りたいかという意思の表れであると信じます。

さらに1994年3月に金泳三大統領をお招きした宮中晩さん会では、天皇陛下は次のように述べられました。「貴国は我が国に最も近い隣国であり、人々の交流は、史書に明らかにされる以前のはるかな昔から行われておりました。そして、貴国の人々から様々な文物が我が国に伝えられ、私共の祖先は貴国の人々から多くのことを学びました。このような両国の永く密接な交流のあいだには、我が国が朝鮮半島の人々に多大な苦難を与えた一時期がありました。私は先年、このことにつき私の深い悲しみ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した。今も変わらぬ気持ちを抱いております。戦後、我が国民は、過去の歴史に対する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貴国国民との間にゆるがぬ信頼と友情を造り上げるべく努めてまいりました」。

天皇陛下が最も早く、最も真摯に、最も明確に韓国のみなさんに謝罪の気持ちを表されたのです。私は天皇陛下の韓国民に対する思いを日本政府、そして日本国民が共有することが必要と思います。

私はこの事実を韓国のみなさんに知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私の総理在任中、李明博大統領から天皇陛下の訪韓を希望するとのメッセージをいただき、その旨を天皇陛下にお伝えをいたしました。残念ながら陛下の訪韓は叶いませんでしたが、5月に誕生する新しい天皇陛下が、韓国民の歓迎の中で訪韓する機会が生まれ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それは簡単ではないと思います。韓国のみなさんの中には、天皇に対する複雑な思いがおりでしょうから。しかし、もしそのような機会が生まれて、新天皇が平成天皇と同じ気持ちで韓国民に接されるとき、日韓関係は大きく前進を遂げることになるかと確信しています。

総括という意味では、天皇陛下よりも国民の意思として日本政府が行うべきです。そして、その試みが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1995年、即ち戦後50周年の記念日にあたり、村山談話が発表されました。村山富市総理はまず、「私たちは過去のあやまちを2度と繰り返すことのないよう、戦争の悲惨さを若い世代に語り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平和の尊さや有難さを忘れがちになっている状況に釘を刺しました。そして、「我が国は、遠くない過去の一時期、国策を誤り、戦争への道を歩んで国民を存亡の危機に陥れ、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私は、未来に過ちなから

しめんとするが故に、疑うべくもないこの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こにあらためて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また、この歴史がもたらした内外すべての犠牲者に深い哀悼の念を捧げます」と、植民地支配と侵略で多くのアジアの人々を苦しめたことに対して、明確に反省と謝罪の言葉を述べました。そして、深い反省に立って、独善的なナショナリズムを排して、平和の理念と民主主義を押し広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結びました。天皇陛下の気持ちを更に具体的に表現をして、日本の進むべき道を示したものとして評価をすべきと思います。

ところがその頃日本は既に、その後失われた20年と言われた経済的な低迷の入口に立たされていきました。日本は敗戦後、反省の下で、平和憲法を制定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放棄しました。そして、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を保持しないことを憲法9条で誓いました。その結果として、日本は経済を中心に発展を遂げ、奇跡的な戦後復興を果たしたばかりでなく、アメリカに次ぐ第二の経済大国にまで成長しました。しかしながら、喜びもつかの間、経済がバブルを起し、その対策に失敗したために、その後長く経済不況の時代が続き、国民は自信を喪失していきました。その間に中国などを筆頭に周辺諸国は急速に経済発展を遂げてきましたので、日本の国民は中国や韓国などの人々に対する寛容な気持ちを次第に失っていったように思います。このような背景が、日本人の一部に、嫌韓、嫌中感情を増幅させていったのです。独善的で偏狭なナショナリズムが広がる素地を作ったのです。

国民の不満は一時は政官業の癒着体質に染まった自民党政権に向かい、2009年の総選挙で民主党が圧勝して、選挙による政権交代が実現し、鳩山政権が誕生し、鳩山政権は、日本の外交の重心を対米依存から、日米安保を基本としながらも、よりアジアを重視する方向に導こうとし、日韓、日中関係は共に良好であったと思います。

しかし、その後安倍自民党政権に再び戻り、安倍首相が村山談話を見直す意向を示し、さらには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河野談話を検証すると述べたことや、靖国神社に参拝したことなどで、日韓関係は首脳会談が長い間開かれなれないと言う最悪の状況となりました。その後、首相の靖国参拝は行われなくなり、また慰安婦問題にも両政府間の合意が成立するなど、一時的には最悪から脱したかに見えましたが、昨今は元徴用工の問題や韓国海軍のレーダー照射問題が起き、日韓関係は極めて不正常的な状態になっ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2015年に米国からの要請もあり、日韓外相会談の結果、合意がなされました。私はこの合意を読んだ瞬間、これでは最終的な決着とは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ました。なぜならば、この合意によって、総理の謝罪と日本政府の10億円の拠出が決められましたが、この合意は「最終的で不可逆的な解決」であるとしたことは、日本は上から目線の態度で二度と謝らないぞと受け止められ、韓国民の感情を逆なです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たからです。案の定、その懸念は当たってしまいました。

その際、私は日本の哲学者である内田樹先生の次の言葉が胸に響きます。「僕たちはいまだに韓国から先の戦争中の従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厳しい批判を受け、謝罪要求をされています。日韓条約で法的には片がついているとか、韓国には十分な経済的な補償をすませているから、いつまでも同じ問題を蒸し返すなというようなことを苛立たしげに言う人がいますが、戦争の被害について敗戦国が背負い込むのは事実上『無限責任』です。定められた賠償をなしたから、責任はこれで果たしたということをお敗戦国の側からは言えない。戦勝国なり、旧植民地なりから、『もうこ

れ以上の責任追及はしない』という言葉が出てくるまで、責任は担い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私はこの考え方が正しいと思います。この気持ちを日本の為政者が持つことができたときに、慰安婦問題は解決するでしょう。

元徴用工問題に関しては、韓国の大法院（最高裁）が賠償を命じた判決に対して、河野外相などが非難の発言を繰り返していましたが、そもそも1991年に当時の柳井条約局長が「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ものではない」と答弁しており、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す。したがって、日韓両政府が、元徴用工の被害者の方々の尊厳と名誉を回復させるために、冷静に話し合いを行うことが極めて大切であると思います。

また、韓国海軍レーダー照射問題は、昨年暮れに日本海において韓国海軍の駆逐艦が海上自衛隊のP1哨戒機に対して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したことに対して、日本政府や多くの国民が大変な危険な行為だとして抗議をしたことに端を発しています。ご承知の通り、この韓国の艦艇は遭難した北朝鮮の漁船を救助している最中であり、韓国軍に自衛隊機への攻撃の意図があったとは思えません。元航空幕僚長の田母神氏によれば、近年の火器管制レーダーは常時ほぼ全周囲に電波を出し続けているので、周辺にいる航空機などには電波照射が行われてしまうようです。したがって、危険だと大騒ぎする話ではないのです。お互いに冷静になって、行き過ぎたことがあれば悪かったと誤れば済む話です。問題は、このような問題が冷静さを失わせて、好戦的な雰囲気一気に傾いてしまう日本の世論にあるように感じます。

今ほど日韓関係において、未来を見詰めて冷静さが求められているときはないように思います。私たちは歴史的に近隣の人々から様々な恩恵や影響を受けてきましたし、これからも最もお互いに影響を与えあっていくでしょう。

近隣同士が憎しみ合えば、お互いに悪い影響を受けますし、反対に近隣同士が愛し合えば、お互いに良い影響を受けるでしょう。日本人と韓国人がもっともとお互いに信頼し合い、協力し合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と願うばかりです。

私の祖父一郎は1954年に総理大臣になり、1956年に日ソ国交回復を成し遂げて辞めました。彼は戦後間もなく総理になるチャンスはありましたが、組閣直前に追放処分となりました。追放され晴耕雨読の毎日の中で、リヒャルト・クーデンホフ・カレルギー伯の著書「全体主義国家対人間」を読み、彼に心酔し、彼の「友愛」の理念に共鳴し、その著書を「自由と人生」と言う名前の本に翻訳しました。そして政界復帰した一郎は、友愛を「相互尊重」、「相互理解」、「相互扶助」と説き、友愛社会の実現に力を注ぎました。

母が日本人のオーストリア人でありますクーデンホフ・カレルギー伯は自由と平等の架け橋として「友愛」の大切さを説きました。20世紀初頭、ヒットラーとスターリンの二つの全体主義に覆われていたヨーロッパにおいて、全体主義と戦う思想として「友愛」を提唱したのです。彼は友愛の理念に基づいて汎ヨーロッパ主義を唱え、それが第二次世界大戦後、欧州石炭鉄鋼共同体を生む基礎となりました。それまで憎みあっていた独仏両国は、石炭や鉄鋼の共同管理をはじめとした協力を積み重ねました。さらに独仏を中心として、ヨーロッパ周辺諸国へも経済を中心として協力関係が深まり、紆余曲折を経ながらその動きは今日のEUへと結実して行きました。今、ドイツとフランスが再び戦争を行うとは誰も想像しなくなりました。ヨーロッパが事実上の不戦共同体になったのです。

私が申しあげたいのは、友愛はけっして過去の理念ではなく、今の世界の政治においてこそ、最も大切な理念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友愛とは自己の尊厳の尊重とともに、他人の尊厳をも同じように尊重することです。自分の自由を尊重しつつ、他人の自由に対しても尊重し、お互いに違いを認めて、個性を活かし合い助け合うことです。別の表現をすれば、友愛は自立と共生に因数分解できます。自分が自立しようと努力することで、己の尊厳が尊重されるのです。しかしながら、自分一人では生きては行けませんので、他者と自分が異なる存在であることを理解し、喜び、助け合って生きていくのです。それは依存やもたれ合いではなく、共生です。共生のない自立も、自立のない共生も望ましくありません。

友愛は人と人との間のみならず、国家間にも成り立つ理念です。近代国家は一国のみで存在しう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他国との様々な協力や影響の下に存在しています。国家として、いかに自立を図りながら他国と共生をしていくかが、国家運営にとって最も重要な要素ではないかと思えます。その意味で申し上げますと、私は現在の日本は米国に依存し過ぎており、より重心を韓国や中国などのアジアに移すことが友愛国家となる道であると思えます。

友愛の理念をもっと広くとらえれば、人間と自然との間にも成り立つとも言えます。人間がいかに自立しながら自然と共生できるかは、人類にとって最大のテーマとも言えます。

政治的にグローバリズムが機能せず、ナショナリズムが高揚している現在、私たちは何をすれば良いのでしょうか。私は、偏狭なナショナリズムを抑えるためには、友愛の理念に基づいてリージョナルな機関を創設して、構成する国がお互いを理解するための場を共有することではないかと思えます。いわゆるリージョナリズムの理念に基づいて共同体を構築することです。共同体の中ではけっして武力を使用することをせず、あらゆる紛争は徹底的な話し合いで解決するように努力することが肝要です。なぜなら、力の行使はけっして紛争の本質的な解決にはならないからです。

私はこの友愛の理念に基づいて、東アジアが不戦共同体になることを夢見て、「東アジア共同体」を創設するべき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既にASEAN10カ国は経済を中心に統合されて、共同体が作られています。また、習近平主席はアジアは運命共同体であり、2020年までに東アジア共同体を創りたいとも述べています。ASEAN 10カ国に日韓中の三カ国が加われば、東アジア共同体の核が形成されます。中国はその意思を示しているのですから、あとは日本と韓国の態度です。私は日本こそその先頭に立って旗振り役をすべきと考えてきました。と言うのも、この地域では、ほかならぬ日本が、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後、74年経った今もなお、真の和解が達成されたとは必ずしも考えられていないからです。70年目の節目の年に、日本が歴史を見つめて、侵略と植民地支配によって苦しめられた人々や国に対して、しっかりと謝罪と償いを行うことができたなら、東アジアが共同体に向けて大きく前進できたはずでした。私は首相在任中に、東アジア共同体を構想することの重要性を訴えてきました。そして、日韓中三国協力事務局をソウルに設置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必ずしも所期の目的を果たせずにいますことは残念です。日韓中サミットが漸く再開されて、日韓中の協力が様々な分野で進められて行きますことを願っています。

今、韓半島が平和に向けて大きく動き始めました。南北首脳会談が何度も開かれ、二度目の米朝首脳会談もハノイで開催されました。二度目の米朝首脳会談では何の合意も得られなかったもので、会談は決裂したとか、失敗だったとか否定的な論調が目立ちましたが、私はそう思いません。北朝鮮が核開発を完全に止め、アメリカが経済制裁を完全に解き、両国間に平和条約が締結される

ことに対して、一回や二回の首脳会談で結論が出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両者がどのように妥協点を見出していか、むしろ今回の会談でその姿がおぼろげながら見えてきただけ、良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大事なことは首脳会談を今後とも継続することで、その間は北朝鮮がミサイルを発射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し、米国も北朝鮮を軍事的に攻めることはありません。米朝関係が質的に改善して、韓半島は危機的な状況から脱してきているのです。韓国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が、今こそ日本や中国が韓半島の平和への動きをサポートする姿勢を示すことが重要です。とくに日本は韓半島の南北分断に大きな責任を有している国なのです、単にトランプ大統領を全面的に支持するというだけではなくて、韓国に積極的に協力する姿勢を示すべきでしょう。百年後を見据えれば、韓半島はどのような形態であるにせよ、一つの国家となっているのでしょから。

数年前までは、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中に、いかにして北朝鮮を組み入れるかは決して容易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今では南北関係が急進展しており、北朝鮮をその枠組みに入れ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私は東アジア共同体の議会を設け、そこでは経済、貿易のみならず、環境、エネルギー、教育、文化、そして安保などあらゆる分野の議論を行う場とするべきと考えていますが、沖縄や济州島をそのような会議を開催する地域としてふさわしいと考えます。日本と韓国が中心的な役割を演じながら、世界の二大大国の一つとなった中国が経済的にも政治的にも東アジア諸国と平和的に発展していくように、また、北朝鮮が経済的にも政治的にも平和で安定的な国家として発展して行くように、そのリード役となるべきと思料します。そこに成熟した国家となっている日本と韓国の大きな生きざまがあるように私には思えます。

このような発想に共鳴して下さる人々が立ち上がり、東アジアを平和で魅力ある地域とするために、そしてその目的を果たすべく、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前進させて実現させるために、日本、韓国、中国が中心となって国家を超えたインターナショナル・パーティを創りませんか。そのことを提案して、私のスピーチを締めくくります。ご清聴有難うございました。

日韓の協力によって日朝国交樹立を!

和田春樹
東京大学 名誉教授

私は本年 2月6日、「2019年日本市民知識人の声明『村山談話、菅総理談話に基づき、植民地支配を反省謝罪することこそ日韓・日朝関係を続け、発展させる鍵である』」を発表した発起人の一人で、声明原案起草者である。発起人21人中の16人は、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糟谷憲一（一橋大学名誉教授）、鹿野政直（早稲田大学名誉教授）、中塚明（奈良女子大学名誉教授）、水野直樹（京都大学名誉教授）など、「2010年『韓国併合』100年日韓知識人声明」の日本側発起人である。三谷太一郎（日本学士院会員、東京大学名誉教授）は2010年声明の署名者であったが、今回は発起人になってくれたのである。今回の声明の発表は2010年声明を日本側で継承したものであった。

2010年「韓国併合」2010年の日韓共同声明は、日本の知識人500人と韓国の知識人500人が出した、併合過程と併合条約を厳しく断罪した共同声明である。声明は、「韓国併合は、この国の皇帝から民衆までの激しい抗議を軍隊の力で押しつぶして、実現された、文字通りの帝国主義の行為であり、不義不正の行為である」と指摘した上で、併合条約について、「力によって民族の意志を踏みにじった併合の歴史的真相」を、「平等な両者の自発的な合意によって、韓国皇帝が日本に国権の譲与を申し出て、日本の天皇がそれをうけとって、韓国併合に同意したという神話」によって覆い隠したものであり、前文も条約本文も偽りであると明らかにした。「かくして韓国併合にいたる過程が不義不当であると同様に、韓国併合条約も不義不当である」――これが声明の結論であった。この結論に基づいて、声明は、1965年の日韓基本条約第二条、併合条約の無効にかんする条項をめぐる解釈の分かれを韓国側解釈によって統一することを提案した。つまり、併合条約は当初より無効であったと認識することを日本政府に提案したのである。

2010年にこのような認識、主張を打ち出した私たちがふたたび立ち上がって声明を出すことにしたのは、昨年秋から日韓関係が対立し、日本の対韓態度が極度に陰悪化した故である。昨年10月30日韓国大法院が強制動員労働者の訴えに対して、日本企業に支払いを命ずる判決を下すや、日本の首相、外相は日韓条約、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して、激烈な反応を示した。11月21日の「和解・治癒財団」の解散の韓国政府発表にさいしても同様な反応を示した。12月20日の韓国駆逐艦の日本の自衛隊機ヘレーダー照射がおこなわれたという事件が起こり、問題が生じると、日本政府は一挙に公開で非難攻撃をおこなう方針をとった。そして、本年1月28日の施政方針演説で安倍首相は、中露との良好な関係を述べ、北朝鮮とは国交正常化をめざすとした上で、韓国との関係に

ついては一切言及せず、韓国無視、敵視の態度を示して、衝撃をあたえた。私たちは日韓関係が異常な状態にあることを認識し、意見を表明することを考えた。

私たちは、ごくあたりまえのこと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た。日本と韓国は隣国で、協力しなければ両国に暮らす者は人間らしく生きていけない間柄である。そのことは普通の日本人、韓国人はわかっている。いま韓国人のなかでは日本旅行がブームとなっており、日本のくらしと文化を人々は再認識しているといわれる。日本では韓流ブームは数次にわたり、現在のごく若い少年少女たちのKポップ・ブームが主流だといわれる。

だが、そういう二つの国の間には、大きな問題、不幸な歴史の問題がある。問題があるから協力はできない、友人になれ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友人になっていて、さらによりよい友人になっていきたいと思えば、大きな歴史の問題をはっきり認識し、それに対してしっかりした態度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日本と韓国、朝鮮の間にある大きな歴史的問題とは植民地支配の問題である。1904年以来41年間の軍事占領、1910年以来35年間の植民地支配が、日本帝国によって朝鮮半島と人々に加えられた。このことが両国の歴史の闇部をなしている。韓国・朝鮮人の歴史の記憶からこのことを消すことはできず、日本人はこれに対して人間的に対処することからのがれることはできない。

朝鮮植民地支配は1945年8月15日をもって終わったが、日本人は国家、国民として韓国併合、朝鮮植民地支配について反省し、謝罪する動きを長く見せなかった。日本は独立した朝鮮の一つの国、大韓民国と国交を正常化する日韓条約を1965年に結んだ。しかし、1910年の併合条約が当初より無効であったという韓国側の主張を受け入れず、合意によってなされた併合であり、植民地支配はなかったと主張し通した。双方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に、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とを確認する」と明記した請求権協定が結ばれたが、根本的な認識の分裂は克服されずに放置されていた。

この日韓条約のもとで日本は大韓民国との国交を維持し、経済的な関係を取りむすび、多面的な協力を発展させてきた。20余年がすぎて、1987年、韓国では、軍部独裁政権の時代に終止符を打つ民主革命が起こった。そのあとに、ようやくにして、1995年自民社会さきがけ三党連立内閣の村山富市総理が閣議決定にもとづいて、敗戦50年の総理談話を発表し、はじめて植民地支配について反省を表明し謝罪した。日本国家は「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大な損害と苦痛を与え」たことを認め、「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したのである。この反省と謝罪は、1998年の金大中大統領、小渕恵三首相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おいて、「韓国の人々」に向けて表明され、2002年の金正日委員長、小泉純一郎首相の日朝平壤宣言において、「朝鮮の人々」に向けての表明となったのである。

植民地支配についてのこの反省と謝罪は画期的な認識、画期的な表明であった。しかし、その完成のためには、なお併合そのものについての歴史認識が付け加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2010年の「韓国併合」100年の機会に日韓1000人の知識人が出した声明は併合についての認識をあらためるように迫ったものであった。この声明はまず2010年5月10日に発表され、ついで第二次署名者を加えて、7月28日に発表された。すると、この声明にこたえるかのように、日本政府、菅直人総理は8月10日、閣議決定により韓国併合100年の総理談話を発表した。そこには次のような日本政府の認識が述べられ、併合についての反省と謝罪が表明されたのである。

「ちょうど百年前の八月、日韓併合条約が締結され、以後三十六年に及ぶ植民地支配が始まりました。三・一独立運動などの激しい抵抗にも示されたとおり、政治的・軍事的背景の下、当時

の韓国人々は、その意に反して行われた植民地支配によって、国と文化を奪われ、民族の誇りを深く傷付けられました。私は、歴史に対して誠実に向き合いたいと思います。歴史の事実を直視する勇氣とそれを受け止める謙虚さを持ち、自らの過ちを省みることに率直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痛みを与えた側は忘れやすく、与えられた側はそれを容易に忘れることは出来ないものです。この植民地支配がもたらした多大の損害と苦痛に対し、ここに改めて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

これが、日本国家が「韓国併合」から100年、植民地支配の終焉から55年にして到達した歴史認識である。韓国国民の批判に促され、自らも努力してつかんだ反省と謝罪の新天地である。この総理談話に基づく行為として、日本政府は、日本統治のもとで朝鮮総督府が奪い、日本の皇室財産とされていた「朝鮮王朝儀軌」などをこの年のうちに韓国政府に引き渡した。したがって、村山談話と菅総理談話は日本政府が韓国、朝鮮に対して考え、施策をとる基準となるべき基本的な文書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このたびの私たちの声明はそのように主張した。だが、声明を出してみて、はっきりしたことは、菅総理談話は日本の中で、日本国民の意識の中に確立していないことであった。私たち声明グループも、国会で社民党又市征治議員に菅談話について一回質問してもらっただけで、日韓共同声明と菅総理談話を論じた本をソウルと東京で2013年に出したにすぎなかった。他方野党の自民党は菅総理談話に激しい敵意を示した。谷垣禎一自民党総裁は、「談話が未来志向の日韓関係の妨げ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する」（朝日、11日）と語った。安倍晋三元首相は、「思いこみで善意を示せばいいというのは大きな間違い、愚かな総理だ」と語った（朝日、11日）。安倍氏が会長をつとめる超党派連連「創生『日本』」は、首相談話は「国民や歴史に対する重大な背信で、容認できない」とする声明を発表した。自民党が政権与党に戻り、安倍第二次政権ができた2012年以降、菅総理談話を徹底的に無視したのは偶然ではない。

であれば、いまはまず、村山談話とともに、菅総理談話を日本国家の方針として再確認させるための努力が先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とともに植民地支配に対する日本の謝罪反省を最終的確認するために、どうしても日韓基本条約第二条の韓国側解釈の採用問題を日韓外交交渉の日程にのぼせる必要がある。日本側の歴史家は併合過程についての新研究をブックレット形式で刊行し、併合条約の無効性、欺瞞性を白日のもとにさらすつもりである。

植民地支配に対する謝罪と反省を最終的に確立することを目指して前進する中で、日韓のあいだに生まれている問題、生まれてくる問題はすべて植民地支配謝罪と反省の精神にもとづいて、両政府、両国民との協議、協力にもとづいて、あらたな心で誠実に解決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すでに日本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が終わって、ほぼ75年が経過した。侵略と支配の実行者、責任者はすでにこの世に存在しない。戦争と植民地支配の被害者の訴えが出されるなら、日本国家の謝罪と反省に基づき、両国政府、国民が協力して、苦しみに対する措置を考え、実施していくべきである。

過去30年間日韓両国民は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努力してきた。韓国の国民が2015年の合意に強い批判と不満を抱いていることは理解するが、この問題はいま新しい局面をむかえていることはあきらかである。文大統領がこの件で日本政府に再交渉をもとめないとし、和解・治癒財団の活動終了を確認して、今後は慰安婦問題の徹底的研究を推進しようとされていることは意義深い。もとより北朝鮮の慰安婦被害者に対してもこれから対処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今日では、いわゆる「徴用工」問題、戦時労働動員被害者問題が日韓間の大きな問題として立ち現れてい

る。日韓条約の際協議がなされ、2000年代には韓国政府が積極的な努力を払ったが、20万人といわれる戦時労働動員被害者とその遺族の不満の声があらためて日韓関係に激震をあたえている。この問題には慰安婦問題と同様に真剣な対処が必要とされる。日韓両政府と日韓の企業が協力して、とりうる方策を考えるべきである。その他に「韓国人BC級戦犯」の問題も存在する。戦犯として死刑判決をうけた93歳の李鶴来老人は日本政府に謝罪と補償を求めつづけている。

日韓の今日の緊張状況の中で、私たちは、三一独立宣言100年の記念日を迎えた。私は、併合されて、10年の苦しみをへながら、朝鮮民族がなおの日、日本人に朝鮮の独立を求めることが日本のためでもあると説得しようとしたことを想起した。三一独立宣言は述べている。「こんにちわれわれが朝鮮独立をはかるのは、朝鮮人に対しては、民族の正当なる生栄を獲得させるものであると同時に、日本に対しては、邪悪なる路より出でて、東洋の支持者たるの重責をまっとうさせるものである」と。

私たちの声明は、次のように結ばれた。「いまわれわれは朝鮮民族のこの偉大な説得の声を聞き、東洋平和のために、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植民地支配への反省謝罪に基づいて、日韓、日朝の相互理解、相互扶助の道を歩むべきときである。」

韓国からの批判の声をわれわれへの説得の声として、うけとめ、日韓の協力、「相互理解」と「相互扶助」によって問題を解決していくことを願うものである。

日韓関係を改善し、正常に維持発展することがいまほど必要とされることはない。それは韓国の文在寅大統領が懸命の努力をして米朝戦争の危機を回避し、米朝首脳会談を開催させることに成功した偉大な達成をさらに延長し、開かれた東北アジア平和プロセスを進めるためには、日本がこれまでの対話の拒否、制裁と威嚇の道からはなれ、日朝国交正常化に確実に向か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からである。日本国民にそのように進むようによびかけ、説得し、一緒に腕をくむのは韓国国民、韓国政府以外にない。日本をして、そのように進ませることは、韓国の国民的な目的の達成にとって、死活的に重要である。韓国だけで米朝両国を仲介して、平和プロセスを無事に進めていくことはできない。

北朝鮮が「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という約束を実現するためには、米国から完全なる「安全の保証」が与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最終的には米日韓朝四国のあり方を根底的に変化させることを意味するのである。韓国と日本には米軍基地が存在する。将来的にどのようなかたちが考えられるのか。そのことだけをとても、大韓民国と朝鮮民主主義国は日本国が両国の同行者となることを必要としているのである。

日本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の国交正常化をすみやかに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これを阻んでいるのは、安倍首相が2006年に打ち出した拉致三原則である。特に第二原則、拉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国交正常化なし、と第三原則、死んだといわれている拉致被害者は全員生きている、ただちに返せ、とが国交正常化をさまたげ、拉致問題の交渉も妨げている。安倍三原則を捨てて、国交正常化にすすんでこそ、拉致問題の正常な交渉も可能になる。オバマ大統領の無条件キューバ国交樹立の前例にしたがい、制裁を維持したまま、平壤宣言に基づいて国交をむすび、大使館を開設し、直ちに核ミサイル問題、経済協力問題、拉致問題での交渉を開始するのがよい。こまでは制裁に抵触しないのである。しかし、国交をむすべば、北朝鮮に文化交流、人道援助は可能であり、北朝鮮は後戻りしない国際環境の改善をうることができる。これによって米朝交渉、南北交渉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はずである。

日韓の協力によって日朝国交樹立を――これが韓朝日三国の新しい協力への道である。

鳩山由紀夫 元日本国首相への質疑

崔相龍(チェ・サンヨン)
高麗大学名誉教授、元駐日韓国大使

鳩山由紀夫元日本国首相(以下、鳩山首相)は、未来志向的な韓日関係のための基調演説の中で、政治信念としての友愛、韓日関係における歴史と外交問題、普段から持論とされて来た「東アジア不戦共同体」について所信を語られました。そして、この間の韓日関係の争点についても率直なご意見を述べていらっしゃいます。

プログラム上では代表質疑となっていますが、あくまでも私個人の意見と質疑であり、私としてはむしろ、鳩山首相の基調講演に対する参加者の皆さまの反応が知りたく、できる限り多くの方の意見を拝聴したいところです。鳩山首相からご提案のあった三つの大きな問題に対するコメントと質疑を要約しますと、次のようになります。

第一に、友愛について

鳩山首相は、ご祖父の友愛精神を受け継ぎ、一貫してご自身の政治信条とされています。フランス革命が目指した三つの理念が自由、平等、博愛ですが、首相は友愛を自由と平等の架け橋であると述べています。演説文を読んでもみますと、韓日関係の困難も友愛の精神で乗り越えんとする真正性を感じられます。

力の政治の現場である国際政治においては自国の国家利益が最優先とされ、そこに友愛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たがって、友愛は大きな政治家の資質ではあり得ますが、現実の外交や国際関係を説明できる有効な概念にはなり難いです。そこで私は、外交では国家利益を相互に認めること、乃至は相互尊重を、友愛として解釈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のですが、これについて首相のご意見をうかがいたく思います。

第二に、未来志向的な韓日関係のために

発表文の中で、鳩山首相は、現在の日本国天皇と村山元首相のお二人の歴史に対する反省について、その真心を高く評価されました。私も大使在任中にお二人と歴史に関する話を交わしたことがあります。現在の天皇が一部の天皇主義者(極右)の歴史観を警戒しておられると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

村山談話については、多くの韓国人が好感を抱いており、社会党委員長出身の首相としての当然の歴史観であろうと思います。

ところで、首相は「金大中－小渕恵三共同宣言」に現れた両首脳の世界認識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考えをお持ちでしょうか。

共同宣言は、1998年10月8日、金大中大統領の日本への国賓としての訪問中に東京で小渕恵三首相と共に調印した協定であり、ひと言で言い表すなら、村山談話を具体化したものであります。同日、金大統領は国会演説を通じて620人余りの衆参議員に共同宣言の内容と精神を説明しました。

これまで日韓の間で結ばれた協定の中で、両国の政治家、専門家、一般国民から広範な支持が得られた良い先例となっています。加えて、一つのエピソード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2018年10月10日の共同宣言20周年記念式では、安倍首相も共同宣言について、両国の指導者の決断として高く評価しています。

第三に、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

鳩山首相は、東アジアでもEUのような共同体の形成が可能であるとし、その研究と実践に邁進しておられます。すでにASEAN10カ国は地域協力機構(regionalism)として根を張っているため、東アジア共同体は、実際のところ日中韓の協力が核であり、加えて朝鮮半島の平和共存、さらには平和統一がその促進要因となるでしょう。

ところが、現実を見れば、習近平主席の「中国の夢」や、安倍首相の「積極的平和主義」、そして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が不確実な状況下では、東アジア共同体の形成を期待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ます。

韓中日の協力に向けて、三国の国民にとって理解しやすいであろう中国の「先易後難」という言葉を思い浮かべながら、具体的な提案を一つさせていただこうと思います。2009年に就任された直後、首相官邸での私とのインタビューの中で、韓中日の音楽家で構成される常設オーケストラをつくりましょうと申し上げた私からの提案を、今も覚えて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当時、首相は大賛成され、進めてみようと言われました。

その後、私の出会った韓日の指導者や芸術家たちは、北京、ソウル、東京を結ぶ「BESETOオーケストラ」について、誰もが賛成を示しました。私が鄭義和(チョン・ウイファ)国会議長の中韓公式訪問団に顧問として同行し、習近平主席にお会いした際、鄭議長から公式提案がなされ、和気あいあいとした意見交換の場を持ったことがあります。韓国と日本は人材が豊かで、最近、中国でも世界的な演奏者が続々と登場しているので、韓中日のオーケストラによるハーモニー(和音)は、そのシナジー効果は相当なものになるでしょう。首相の友愛精神にも合致し、もし、日本と中国の首相、韓国の大統領が会う年次首脳会議での議題にもなれば、それ自体だけでも、東アジアの平和に向けた良きメッセージになるだろうと信じています。

いま、「金大中・小渕恵三 共同宣言」を考える

崔相龍(チェ・サンヨン)
高麗大学名誉教授、元駐日韓国大使

金大中大統領は、1998年10月7日から10日まで日本を国賓訪問しました。訪問期間中の10月8日午前、金大中大統領と小渕恵三日本国内閣総理大臣は、〈21世紀の新たな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以下、共同宣言)に署名しました。同日の午後、金大統領は600名以上の日本の衆参議院が参加する中、共同宣言の精神と内容が盛り込まれた国会演説を行いました。

私は当時、国賓訪問の準備に携わり、特別随行人として現場にいました。その後、大使として共同宣言の精神を実践する過程では困難も多くありましたが、忘れ難い大きなやりがいもありました。

韓日関係の過去、現在、そして特に未来を考える際、この共同宣言が韓日両国の国民から同意を得ることのできる最善の協定であるということは、両国の専門家たちも認めるところであります。

共同宣言は、11項目の中核的内容と43項目の行動計画で構成されており、国会演説は、金大統領が日本国民を代表する衆参議院にNHKの生中継を通じて、共同宣言に基づいた未来のビジョンを丁寧に説明したものです。この二つの文書には、歴史と外交、国家の利益と国民感情など、至難な問題が厳に存在する現実の中で、21世紀の韓日関係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如何に否定的な要因を克服することができるかについての深い苦悩と思慮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そして、東アジアにおいて、人権、民主主義、市場経済の普遍的価値を共有している両国の国民に対する希望と、朝鮮半島の平和定着に向けた両国の役割への期待も含まれています。

私はこの共同宣言と国会演説の内容の中に息づいている持続的で未来志向的なメッセージを、三つに分けて簡単に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

1. 冷戦後の韓日関係のマイルストーン

世界政治の次元から見れば、1965年の韓日国交正常化は、東西冷戦の絶頂期に行われたものでした。そのため、韓日両国民による条約反対運動が激しく起こり、政府レベルにおいても歴史問題に対する具体的で真摯な議論は排除されました。その後、米ソ冷戦と朝鮮半島の冷戦という二重構造の中で、韓国は、米国、日本と共に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を守る、冷戦の中心軸を形成しました。

1998年の金大中・小渕恵三共同宣言は、世界的なレベルで東西冷戦が崩壊した状況の下で行われました。そのため、共同宣言は、国内冷戦による葛藤にさらされることなく、両国民からの広範な支持の中で署名されました。

何よりも画期的だったのは、1965年の基本条約当時は留保されていた歴史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と、韓国政府の「和解と協力」を、相互に確認して、初めて両国の首脳が直接協定の署名式を執り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韓国と日本の学界や論壇では、第二次世界大戦後の韓日関係史から1965年の基本条約と1998年の共同宣言の歴史的な意味を浮き彫りにして、1965年を起点とする「65年体制」と、新たな出発という意味での「98年体制」という概念が通用されています。

2. 相互認定と価値共有の良き先例

皆さまご周知かと思いますが、ヘーゲルは現実を概念的に把握する学問が哲学であるとし、人間や国家、そして世界史に関する概念を最も多く生み出した哲学者です。その中でも本日のテーマとの関連で私の深い関心とするところの概念が、まさに相互認定(gegenseitige Anerkennung；相互承認)であります。個人であれ、国家であれ、暮らしと歴史の過程では認定闘争(Kampf um Anerkennung；承認をめぐる闘争)がありがちで、それが極端に及ぶと、個人は死にものぐるいになり、国家は戦争に巻き込まれることとなります。そこでヘーゲルは、個人であれ、集団や国家であれ、「相手に対する配慮を通じた自立」を互いに認めることによって和解(Versöhnung)に到達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えました。

私の現場経験は短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相互認定(承認)を通じて平和を実践することが、真の外交なのだということを実感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何よりも、金大中大統領と小渕恵三首相には、真心を持ってお互いを尊重する心構えがあり、最近出版された口述史(oral history)にお二人を見守った上での私の証言が収録されています。

小渕首相は、戦後の韓国の産業化と自主的民主化、特に平和的な政権交代を初めて成し遂げた金大統領に敬意を表しています。これに対し、金大統領は、日本が平和憲法の下で非核3原則を守り、開発途上国への経済支援を通じて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貢献したことを高く評価しました。困難に遭ったときの友こそが真の友人であることを想起させながら、通貨危機を克服する過程で助けてくれた日本に対して感謝を忘れませんでした。

そして、両首脳は、韓日両国が自由民主主義市場経済という体制理念を共有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特に、金大統領は国会演説において、人権をいわゆる「アジア的価値」を越える普遍的価値として受け入れており、高い教育水準を保ちながら東洋と西洋に対するバランスのとれた教養と見識を有している、両国民への信頼と期待を表明しました。

3. 21世紀の韓日関係の礎

改めて強調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共同宣言の正式名称は「21世紀の新たな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日本語では「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です。20年前に署名されたものですが、一回きりの約束ではなく、現在進行形の協定であります。

革命と戦争、そしてイデオロギーと軍事力の組織的な二極化であった東西冷戦など、極端な時代であった20世紀の夕暮れに立って、21世紀の脱冷戦・平和の時代の韓日関係を先取りした戦略的な視点が、この共同宣言の主たる内容です。

いま、私たちは、東アジアの平和の可能性を試す重要な転換点に立っています。東アジアの平和の核心的課題が、朝鮮半島の安定と平和です。金大中大統領は、1998年の日本との共同宣言に続き、2000年には分断体制55年目にして南北の首脳会談を開きました。これまで紆余曲折が

多くありましたが、今や韓国は、すべての国際関係において対立や戦争の道ではなく、交流と平和の道を開いていくでしょう。共同宣言の行動計画では、両首脳が南北の関係改善と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の協力を約束しています。北朝鮮問題をめぐり、私たちが共同宣言での約束と小泉政権当時の「平壤宣言」の有効性を認めるならば、朝鮮半島の平和の条件をつくり上げる現時点での日本の役割が、いつにも増して重要であるはずだと私は判断しています。北朝鮮の非核化が後戻りできない方向にまで進展を示せば、日朝関係の正常化の道が開かれますでしょうし、その道は朝鮮半島の平和共存の道にも合致するものであります。

現代の国際政治における平和共存は、冷戦時代や権力闘争の過程での期限付きのイデオロギーの併存ではなく、実際のところ、経済交流を媒介にした平和的相互依存(peaceful interdependence)となっています。近頃、あまりにも軽く使われている「新冷戦」の対立構図が過去の東西冷戦と決定的に異なる点は、利害当事国間の経済的な相互依存関係が構造的に深いということです。

したがって、米中間の覇権争いや様々な形の自国優先主義が、かつての東西冷戦当時の二極化とは異なる様相を示している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ります。経済平和論、つまり、経済的な相互依存関係にある当事国の間では、貿易紛争はあり得ても、戦争への移行は起こり難いという視点が、今でも意味があると捉えるからです。

私は、平和研究ではすでに根付いている経済(通商)平和論とともに、「文化平和論」の有効性を提起しています。経済的相互依存に加え、文化交流が盛んな国家の間では戦争の可能性が減らされ得るという仮説です。文化は、一方では、ソフトパワーの中核でありながら、それ自体が非軍事的領域であるという点で平和志向的な要因であり、他方では、ある民族や国家の文化が強力な政治イデオロギーとなって、アイデンティティの過度な形として表れる場合は、紛争や戦争の要因になってしまう恐れもあります。しかし、国家間の継続的な文化交流は、文化の閉鎖性を自ら拒絶する相互学習(mutual learning)の過程であるから、21世紀に入って平和文化(peace culture)という概念が普遍化されているように、平和を意識化させ生み出して行く上で大いに貢献するというのが、経験的に証明されています。

共同宣言と国会演説を通じて歴史的事実の認識、反省と和解を確認した過程に対し、特に注目しておくべきことは、和解の具体的な実践として、当時の韓国内の多くの反対世論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大衆文化を韓国市場に開放したことです。このように「文化平和論」は、閉鎖から開放へと方向を転換する公共外交により、文化交流をもって平和を実践することを中心内容としています。

ご周知の通り、共同宣言の後にも韓日関係は多くの困難を経てきており、今もその延長線上にありますが、その渦中にも文化交流は、相互学習による相互理解、相互承認の連続性を継承することで、韓日間の葛藤要因を大きく緩和させたことが証明されています。2005年の「韓日友情年」から毎年開催されてきた韓日文化祝祭(日韓交流おまつり)は、若い層を中心に毎年好評が高まっています。

以上、共同宣言と国会演説に盛り込まれた未来志向のメッセージについて、私なりの体験をもとに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今後、両国の指導者が忍耐と寛容をもって金大中・小渕恵三共同宣言の精神を生かして行けば、韓日間で克服できないことはないはずだと信じています。

参会者

| | | | |
|-------------------------------|-------------------------------|-------|----------------------------------|
| 金道鉉 | 前 文化體育觀光部 次官 | 李富榮 | 東アジア平和會議 運営委員長 |
| 金聖在 | 金大中アカデミー 院長, 前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 李三悅 | 對話文化Academy 理事長 |
| 金淑垠 | 前 誠信女子大 教授, 聲樂家 | 李承茂 | 韓日反核平和聯帯 共同代表, 循環經濟研究所 所長 |
| 金淑子 | 前 祥明大 教授 | 李承煥 |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會長 |
| 金泳鎬 | 檀國大 碩座教授, 前 産業資源部 長官 | 李時載 | カトリック大 名譽教授, 前 環境運動聯合 共同代表 |
| 金容福 | アジア太平洋生命學研究院 院長 | 李元栄 | 水原大 教授 |
| 金鎮炫 | 世界平和フォーラム 理事長 | 李長熙 | 韓國外國語大 名譽教授 |
| 金興洙 | 牧園大 名譽教授, 韓國YMCA全國聯盟 理事長 | 李鍾旻 | 經濟社會フォーラム 理事長, 前 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長 |
| 南基正 | ソウル大 教授, 日本研究所 研究部長 | 李鐘贊 | 大韓民國臨時政府記念館 建立委員長 |
| 朴庚緒 | 大韓赤十字社 會長 | 李泰鎮 | 前 國史編纂委員會 委員長, ソウル大 名譽教授 |
| 朴相増 | 前 アジア基督教協議會 理事長 | 李夏慶 | 中央日報 主筆 |
| 朴元淳 | ソウル市長 | 李賢淑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副議長, 前 大韓赤十字社 副總裁 |
| 朴仁奎 | Pressian 代表 | 李洪九 | 前 國務總理 |
| 朴泰植 | 聖公會大 教授 | 李鴻政 | 牧師,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 總務 |
| 白樂晴 | 文學評論家, ソウル大 名譽教授 | 鄭康子 | 參與連帯 共同代表 |
| 梁起豪 | 聖公會大 教授 | 池明觀 | 前 翰林大 碩座教授 |
| 劉承三 | 前 ソウル新聞社 社長 | 崔相龍 | 高麗大 名譽教授 |
| 柳在乾 | 如海財團 理事長 | 鳩山由紀夫 | 前 日本 総理 |
| 尹慶老 | 前 漢城大 總長 | 和田春樹 | 東京大 名譽教授 |
| 尹泳五 | 國民大 名譽教授 | | |
| 李萬烈 | 前 國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淑明女子大 名譽教授 | | |
| 李萬烈 (Emanuel Pastreich) | アジアインスティテュート 理事長, 前 慶熙大 教授 | | |

©대화록 32

3.1운동 100주년 특별 대화모임

한일 관계: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

| | |
|------|---------------------------------|
| 발행일 | 2019.4.30 |
| 발행처 | 대화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평창6길 35(03003) |
| 전화 | 02.395.0781 |
| 팩스 | 02.395.1093 |
| 이메일 | tagung@daemuna.or.kr |
| 홈페이지 | www.daemuna.or.kr |
| 멋지음 | PaTI |